

2013 통일의식조사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

일시 2013. 9. 26 (목) 13: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일정 및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14:10~16:00

2013 통일의식 조사결과

사 회 김병연 (IPUS 부원장)

발표 1 통일의식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발표 2 대북인식
김병로 (IPUS HK교수)

발표 3 대북정책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발표 4 주변국관계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16:00~16:15 휴 식

16:15~18:00


교류협력, 북핵문제 양립가능한가?

사 회 박명규 (IPUS 원장)

패 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통일의식조사 연구개요	09
발표 1 : 통일에 대한 인식	19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발표 2 : 대북인식	41
김병로 (IPUS HK교수)	
발표 3 : 대북정책	59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발표 4 :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03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연구개요

통일의식조사 연구개요

1. 조사의 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수행해온 통일의식조사는 그 동안 북한학을 비롯하여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통일의식조사는 그 자체로서 자료축적과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남북한통합지수' 중요한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통일, 북한,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측정하면서 대내적 통합요인(사회적 합의)와 대외적 통합요인(주변국의 협조) 등이 대북 정책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정책의 평가와 재정립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집합적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식조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는 2013년에 들어서 제3차 핵실험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개성공단의 사업장이 폐쇄되어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반기 들어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고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도 이래의 한반도의 긴장긴장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남북간 대치국면을 통하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반응, 평가를 알아낼 수 있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정부교체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었는데, 올해도 박근혜 정부 첫 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교체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국민들의 대북정책의 평가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도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적 흐름을 포착해 보는 것도 통일의식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정책 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7년 간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주변의 각국들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2013년의 현 시점에서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의식조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종합적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듯 무력충돌의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반응과 협조의 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 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 체제 등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시

계열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식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통일의식조사도 연구의 내용 등에 있어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축적과 의식의 시계열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사의 내용을 큰 폭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달라지는 상황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 조사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한 새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연구보고서가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 이후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3주 동안 1대1 면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통일과 북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내용과 항목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도 기본적으로 기존 조사의 문항들을 변경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문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였다. 그리고 정부 및 정당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문항은 설문문항의 내용이나 선택지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3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부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 정책들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발전에는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도 조사하였다. 2012년 조사부터는 북한정권이 향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이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 대북 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뼈라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 등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고, 대북지원의 수준에 대한 질문과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교류협력 연계, 대북 정책의 국민의견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질문들은 2013년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조사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이 밖에도 설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부문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2012년 조사부터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위상이 무엇이며 이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조사에 포함시켰다. “통일을 위하여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질문들과 내용이 중복되어 2013년 조사부터는 제외되었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의 근간을 이루는 다섯 가지 영역 이외에도 통일의식조사는 기초적 배경 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학적 배경변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기초 교차분석, 심층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위한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평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조사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등과 관련된 질문들은 제외되었으며, 정당지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은 일부 정당의 이름 변경으로 선택지가 변경되었다.

(2012년 조사와 2013년 조사의 설문내용 비교)

삭제된 문항

■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의 대북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방안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6.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7.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어도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9.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및 수정된 문항

12.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3.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 북한도 하나의 국가이다.

2013년 통일의식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 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으며, 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통일평화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¹⁾

200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 기간 및 조사 표본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7월 04일 - 7월 20일 (13일간), 1,200명
- 2008년 8월 21일 - 9월 10일 (15일간), 1,213명
- 2009년 7월 15일 - 8월 05일 (16일간), 1,203명
- 2010년 7월 12일 - 7월 27일 (12일간), 1,200명
- 2011년 7월 26일 - 8월 15일 (20일간), 1,201명
- 2012년 7월 5일 - 7월 31일 (26일간) 1,200명
- 2013년 7월 1일 - 7월 22일 (21일간) 1,200명

1) 2013년 10월 1일 현재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조사의 원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을 통하여 설문자, 코드북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2013년 12월 이후부터는 동일한 자료들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여러 학문분야 및 정책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통일의식 조사결과

• 발표 1

통일에 대한 인식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13년 통일의식조사는 박근혜정부의 첫 해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평가’보다는 ‘기대’가 더 앞선다. 통일의식조사는 첫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세 개의 정부를 경험하고 있다. 2007년 첫 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압기 말기이자 2차 정상회담이 실시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점에 이른 시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공고롭게 남북한 간의 대립국면이 계속됨으로써 이전 정부와 대조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북한에서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정권 역사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남북관계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며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통일 인식은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추세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새 지도부인 김정은 정권이 채택하는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은 남한사회에서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호의적인 정서를 해치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그리고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이 결국에는 잠정적 중단되는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 인식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마저 아직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3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 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희망체제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비교분석을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201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23.6%, ‘약간 필요하다’ 31.3%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4.8%였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1.5%,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3.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는 하였지만 통일을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표 1>에서 보이듯 2008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통일의식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7년 63.8%에서 2008년 51.6%로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2013년 5년 동안 한반도 60%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2012년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로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올해 다시 소폭 하락하여 2009년부터 4년 연속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이듯 통일이 필요없다는 인식은 2009년 이후 거의 변화 없이 20% 수준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반반 또는 그저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의 응답 일부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동했던 것에 반해, 2013년에는 ‘반반 또는 그저그렇다’의 응답률(21.5%)은 전년도(21.6%)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일부가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고 반대로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늘어난 데는 2012년에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12월 12일 장거리로켓(은하3호) 발사,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등 김정일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호전적인 행위를 계속 일으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올해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63.6%로 지난해 조사 62.3%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여성은 45.7%로 지난해 51.5%에 비해 5.8%p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남녀간 격차는 17.9%p이다. 지난해 남녀간 격차가 10.8%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지난 몇 년간에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19~29세 연령대의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는 40.4%, 30대 51.6%, 40대 60%, 50대 이상 62.7%로 나타났는데, 30대부터 60대까지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가장 젊은 연령대인 19~29세 응답층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 연령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에 불과하며 지난해 46.7%였던 것에서 6.3%p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지난해 경우 30대는 51.4%, 40대는 63.2%, 50대 이상은 63.5%였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필요없다’라는 응답률에서는 19~29세 29.2%, 30대 22.2%, 40대 24.3%, 50대 이상 20.5%로 연령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9~29세의 연령대 응답자들은 ‘반반 또는 그저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이 30.4%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처한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유보적 입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 통일의 필요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통일필요	63.8	51.6	55.8	59.1	53.7	57.0	54.8
반반	21.1	24.9	23.6	20.8	25.0	21.6	21.5
통일불필요	15.1	24.9	20.6	20.8	21.3	21.4	23.7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호남권이 64%로 가장 높은 반면에, 지난해 응답률이 높았던 강원과 제주는 각각 51.4%, 61.5%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8%p, 7.7%p가 하락하였다. 특히 북한지역과 군사분계선을 맞닿고 있는 강원 지역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로 지난해 대비 3.3%p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호남권 역시 지난해보다 2.1%p 줄었다. 지난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충청권과 영남권의 경우는 올해 각각 60.2%, 53.2%로 소폭 상승하였다.

정치적 성향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패턴은 올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진보적 성향의 응답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 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64.9%,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51.6%가 통일의 필요성을 지지하여 두 집단 간의 격차가 13.3%p로 벌어졌다.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은 40.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7년간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6%→2008년 57.9%→2009년 44%→2010년 43%→2011년 41.6%→2012년 45.9%→2012년 40.3%로 변화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였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는 5.6%p 다시 하락하고 말았다.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장거리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론에 대한 회의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이 30.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7년간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 19.2%→2008년 14.5%→2010년 24.1%→2011년 27.3%→2012년 25.3%→2013년 30.8%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4.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8.3%,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5%로 이상의 항목들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에서 줄어든 응답이 고스란히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응답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 18.7%→2008년 17.1%→2009년 18.6%→2010년 20.7%→2011년 17.6%→2012년 14.5%→2013년 14.3%로 ‘통일 한국’과 ‘선진국’과의 결합성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살펴볼 ‘통일의 이익 기대감’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통일 시너지 효과보다는 통일로 인한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같은 민족	50.6	57.9	44	43	41.6	45.9	40.3
이산가족 고통해소	8.9	6.8	8.5	7.0	7.2	9.1	8.3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19.2	14.5	23.4	24.1	27.3	25.3	30.8
북한주민 삶 개선	1.8	2.8	4.2	4.0	4.9	4.4	5.5
선진국으로 도약	18.7	17.1	18.6	20.7	17.6	14.5	14.3

연령별로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은 9세~29세의 경우 37.2%, 30대 36.4%, 40대 40.7%, 50대 45.1%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올해에도 역시 계속되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해와 비교해 50대 이상에서 12.5%p가 하락해 연령 집단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의 통일론이 고령층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반면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쟁위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던 19세~29세 연령집단(31.2%)을 제치고 30대가 통일의 이유로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9~29세 16.8%, 30대 16%, 40대 13.1%, 50대 이상 12.4%로 취업 문제에 민감한 20대와 30대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을 당위, 규범, 민족동질성의 차원보다 실용적, 도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통일인식에 대한 연령층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조사에서도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의 응답자 52.6%가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해 다른 학력집단들과 매우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직업 분포에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63.6%가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해 다른 직업종사자들의 응답률과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실용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직업 분포에서는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의 응답이 전업주부가 35.3%로 가장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이 지난해 비해 9.2%p가 감소하였고, 대신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의 응답률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응답률이 각각 지난해 대비 4.3%p, 4%p 증가하였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6.7%p 감소하였고, 대신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의 응답률이 지난해 조사에 비해 6.8%p가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변화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40.3%)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41.2%)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진보적 성향보다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속도

지난 7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점진적 통일 입장의 응답률은 2007년 70.6%→2008년 64.8%→2009년 68.3%→2010년 67%→2011년 66.9%→2012년 65.1%→2013년 61.8%로 변화했는데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 입장 역시 대체로 10%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0.6%→2008년 9.6%→2009년 8.6%→2010년 10%→2011년 9.6%→2012년 9.6%→2013년 11.3%로 올해에 통일지상주의 입장이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안보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통일지상주의 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의 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7년 7%→2008년 8.5%→2009년 7.5%→2010년 6.9%→2011년 8.2%→2012년 7%→2013년 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턴의 안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과정이나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통일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적 태도를 선호하고 있다.

〈표 3〉 통일의 추진 속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능한 빨리 통일	10.3	9.6	8.6	10	9.6	9.6	11.3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70.6	64.8	68.3	67	66.9	65.1	61.8
현재상태 유지	11.8	16.3	15.6	16.1	15.3	18.3	18.9
통일 관심 없음	7	8.5	7.5	6.9	8.2	7	8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응답률이 15%로 여자의 응답률 7.3%보다 두배 넘게 많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여자의 응답률이 23.5%로 남자의 응답률 1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견해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 통일에 관한 전형적인 연령별 응답 패턴이 올해 조사에서도 유지되었다. 2011년 조사 이후 30대, 40대는 점진적 통일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현상유지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응답은 호남권이 22.8%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수도권 11.3%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 응답률이 한자리수를 나타냈다. 군사분계선을 맞닿아 있고 남북관계 문제에 민감한 강원 지역조차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반면, 현상유지를 바라는 응답은 영남권이 2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충청권 19.5%, 수도권 18.6%로 나타났다.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응답의 경우는 강원이 85.7%로 매우 압도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들의 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치적 성향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에 68.6%가 지지를 보여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 56.2%와 비교해 12.4%p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에, 현상유지의 경우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26.3%가 선택했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14.5%에 불과해 두 집단 간의 격차가 11.8%p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 역시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올해 조사에서 주목해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아마도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5.8%로 어떤 가능한 시기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 국민 100명중 25명, 즉 1/4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2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년 이상'이라고 보는 응답이 18.3%로 나타났다. 반면에,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3.7%에 불과, '1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도 13.3%로 작년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임을 말해준다.

〈표 4〉 통일이 가능한 시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이내	3.7	2.3	2.8	3.4	2.5	2.9	3.7
10년 이내	23.5	13	16.9	17.8	16.3	14.5	13.3
20년 이내	30.8	22.1	27.6	24.1	26.1	25.9	25.3
30년 이내	14.7	15.5	16.2	13.4	14	17.8	13.7
30년 이상	13.8	24.9	16.5	20.8	19.8	19.8	18.3
불가능	13.3	22.3	19.8	20.6	21.3	19.2	25.8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을 하위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성별로 보면 여자 응답자 31.8%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해 남자 응답률 19.9%와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9~29세 연령층이 28.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40대가 23.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 31.6%, 고졸 29%, 대학교 이상 20.1%로 응답률이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은 8.6%로 강원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은 18.9%인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은 33.6%에 달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서는 남자의 응답률이 여성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장기간으로 갈수록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단기간에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장기간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3. 통일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8.6%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지난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5.8%→2008년 47.5%→2009년 53.2%→2010년 53.5%→2011년 50.7%→2012년 51.6%→2013년 48.6%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50% 수준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이래 5년만이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1.8%만이 ‘이익이 된다’라고 응답해 지난해보다 4.2%p가 감소했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30.3%→2008년 27.7%→2009년 23.9%→2010년 24.8%→2011년 27.8%→2012년 26%→2013년 21.8%로 변화해 2007년 이후 올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통일이 남한이라는 집합체에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개인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사이에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에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 간 응답률 격차가 29.3%로 가장 컸던 이래로 양자간의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작년에 25%p였던 격차가 올해 26.8%p로 다시 늘어났다.

<표 5>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한사회	55.8	47.5	53.2	53.5	50.7	51.6	48.6
개인	30.3	27.7	23.9	24.8	27.8	26	21.8

통일이 남한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개인적 유인책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격차만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수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면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통일로 인한 이익 기대감에 대해 남녀간 성별 격차는 뚜렷하다.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에서 남성 응답률은 각각 54.7%, 26.1%로 여성 응답률 42.9%, 17.3%보다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2007년 이래 7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로 인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로 인한 기대감이 낮아진다. ‘집합적 이익 기대감’의 경우 19~29세 연령층은 50%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44.9%만이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40대가 24.9%로 19세~29세 연령층(23.6%)을 제치고 가장 기대감이 높았으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15.4%만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단과 개인 모두에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집합적 이익 기대감’의 경우 중졸 이하는 36.8%, 고졸 45.6%, 대학교 이상 55.6%로 나타났고,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경우 역시 중졸 이하는 14%, 고졸 19.1%, 대학교 이상 26.5%로 나타나 교육수준간 응답률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감을 비교해보면,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조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299만원 집단에서는 45.5%, 300~399만원 집단에서는 50.1%, 마지막으로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2%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소득수준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호남권의 경우 62.3%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강원 지역이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45.5%)을 보였던 영남권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는 43.3%로 두 번째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다른 지역별 응답률 순위가 나타났다. 충청권이 2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호남권 24.6%, 수도권 22.9% 순서로 이어졌다. 지난해 조사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강원과 제주 지역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는 하순위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별 응답 태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응답자들 간의 응답률 격차가 크게 줄었다가 2012년에 양자간의 응답률 격차가 22.3%로 크게 벌어졌다. 그런데 올해 양자간의 응답률 격차는 9%로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2012년 62.5%에서 2013년 57.4%로 5.1%p 감소하였고, 보수 성향 집단에서는 반대로 2012년 40.2%에서 2013년 48.4%로 8.2%p 증가하였다. 올해 나타난 진보 성향의 응답률은 2012년 상황이 예외적이었고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으나, 보수 성향의 응답률에서 보인 큰 부침(浮沈)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6〉 정치적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이익이 될 것이다' 응답 경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수	49.8	38.3	41.9	46	53.4	40.2	48.4
중도	53.7	44.3	54.5	53.6	46.5	50.9	45
진보	65.7	65	62.9	58.3	55.5	62.5	57.4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하는 것은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은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 그것은 분명히 통일의 추진동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오히려 통일이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데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각 사회문제별 개선 기대수준을 응답률 순위로 살펴보면, 〈표 7〉에서 보이듯 실업문제 22.3% 〈빈부격차 14.8%〉 부동산투기 14.5% 〈이념갈등 10.2%〉 지역갈등 9.2% 〈범죄문제 6.2%〉 순서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3, 4순위가 이념갈등, 빈부격차였던 점에서 약간 차이가 보인다. 실업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문제에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10%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범죄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7년 조사 기간 동안 범죄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한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이 됐을 때 치안 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개선될 것이다’는 응답이 22.3%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투자, 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취업문제에 민감한 젊은 층일수록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연령별로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분포를 보면, 19~29세 26.4%, 30대 23.3%, 40대 20.7%, 50대 이상 20.3%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2013년 조사에서도 남한 국민의 다수는 통일이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회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또는 효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추진력이 생겨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이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표 7〉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부격차	17.7	10.1	14.7	15.8	13.2	12.2	14.8
부동산투기	21.4	14.4	19.4	19.7	17.4	16.5	14.5
실업문제	30	20.5	27.5	25.9	25.6	23.6	22.3
범죄문제	9.2	5.8	9.3	9.1	6.9	6	6.2
지역갈등	14.4	7.6	13.3	13.1	10	10.9	9.2
이념갈등	17.3	8.2	16.4	16.4	16.4	13.5	10.2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 각각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남한사회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 조사에서부터 설문이 포함되었고,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2009년 조사에서부터 포함되었다.

우선, 남한사회의 경우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이 261%로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응답 23.6%보다 많았다. 하지만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지난해 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7년간의 추이를 보면 통일이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는 응답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주주의 완성을 통일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응답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연계하여 접근하던 인식의 틀에서 탈피하여

통일과 민주주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젊은 층보다는 나이든 연령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응답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할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보수와 진보간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응답에서는 보수 21.4%, 진보 28.7%로 두 집단간의 응답률 격차가 7.3%p로 벌어졌다.

〈표 8〉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19.9	20	19.3	18.1	19.7	23.6	23.6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	31.3	23.5	31.2	29.8	25.1	24.8	26.1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없음	48.7	56.6	49.5	51.9	55.3	51.7	50.3

남한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009년 28.7%→2010년 34.3%→2011년 37.6%→2013년 34.7%로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반면에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3%로 전년도 3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32.3%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 가지의 응답비율이 거의 균등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은 5년간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를 가지고 보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내부의 자생적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대신에 통일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북한의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은 40대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세대적 특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19~29세 연령대의 응답률은 3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응답의 경우는 19~29세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 우선이나 민주화 우선이나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정치적 성향 변수에서 경계가 더 모호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에서 진보 35.5%, 보수 36%로 나타났고,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에서 역시 진보 29.1%, 보수 30.2%로 두 집단 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의 민주화 선행론에 있어서 기존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격차가 컸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민주화 선행론에 대한 응답률의 경우 2011년에 진보 36.5%, 보수 25%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2년 사이에 진보와 보수 간 격차가 매우 빠르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보 집단의 응답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보수 집단에서 북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표 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28.7	34.3	37.6	38.7	34.7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27.8	33.5	29.4	32	33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없음	43.6	32.2	33	29.3	32.3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한의 현 체제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응답률은 2009년 43.6%→2010년 44.4%→2011년 48.9%→2012년 44.2%→2013년 43.6%로 5년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평균값 45%).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응답률은 일정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2009년 39.1%→2010년 38.8%→2011년 35.6%→2012년 37.7%→2013년 35.4%로 변화했는데, 이 응답률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평균값 37%). 다시 말해서, 이 응답에는 남한의 현 체제나 북한의 현 체제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통일된 국가에서는 남북한 각각 체제에서 좋은 점들을 절충한 체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2009년 13.3%→2010년 12.6%→2011년 15.1%→2013년 16.9%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응답은 한편으로는, 연합제 또는 연방제와 같은 형태의 통일국가를 의미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응답은 통일을 원하기는 하지만 단일체제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갈등 문제는 회피하고 싶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응답률 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 48.8%, 30대 42.5%, 40대 43%, 50대 이상 41.4%로 나타났다. 30대~50대 이상의 응답집단에서는 모두 전체 평균값(43.6%)보다 밀들었던 반면에, 19~29세 응답집단에서는 전체 평균값을 훨씬 웃도는 응답률을 보였다.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응답을 가장 선호한 연령집단은 40대(37%)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집단은 30대(18.9%)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였던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5.9%)이 유일했다. 이러한 연령별 응답 분포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응답의 경우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히려 19~29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응답에서는 19~29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응답률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된 통일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북한 체제 절충형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장 낮은 소득구간인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응답률은 39.6%,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응답률은 43%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44.3%, ‘남북한 체제 절충형’ 35%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대조적인 응답 패턴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를 가장 선호한 지역은 영남권(48.4%)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강원(22.9%)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북한 체제 절충형’을 가장 선호한 지역은 강원(51.4%)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30.8%)였다. ‘남북한 두 체제 유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호남권(23.7%)이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남권(15.1%)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영남권은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에 ‘남북한 체제 절충형’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수도권(40.5%)이 올해 31.7%만이 선택하여 제주지역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모든 이념 성향에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중도적 성향의 응답 집단과 진보집단에서는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성향의 응답률 경우 2011년 49.2%→2012년 40.4%→2013년 39.6%로 변했으며, 진보성향의 응답률 역시 2011년 46.2%→2012년 45.1%→2013년 43.9%로 감소세에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의 응답률은 2011년 51.8%→2012년 51.2%→2013년 51%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북한 체제 절충형’의 경우 진보(37.8%)와 중도(36.6%) 집단 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의 경우는 진보(14.9%)와 보수(14.6%) 집단 간 응답률이 거의 비슷했던 반면에 중도 집단의 경우 19.1%로 가장 높았다.

〈표 10〉 통일한국의 체제

	2009	2010	2011	2012	2013
남한체제로 단일화	43.6	44.4	48.9	44.2	43.6
남북한 체제의 절충	39.1	38.8	35.6	37.7	35.4
남북한 두 체제 유지	13.3	12.6	12.3	15.1	16.9
어떤 체제도 무방	4.0	4.2	3.2	3.0	4.1

6. 소결

2013년 통일의식조사는 남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여가 지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장거리로켓(은하3호) 발사,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인력 철수 등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으킴으로써 그 여파가 계속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올해 조사결과는 이러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통일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54.8%)이 절반을 넘기는 하였지만 통일을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반반 또는 그저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의 응답 일부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동했던 것에 반해, 올해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일부가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고 반대로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늘어난 데는 2012년에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호전적인 행위를 계속 일으켜 북한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통일회의론 입장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은 40.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것은 통일=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논리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이 30.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에서 줄어든 응답이 고스란히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응답으로 이동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인력 철수 등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통일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현실적 문제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한국’과 ‘선진국’과의 결합성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7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은 11.3%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안보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통일지상주의 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의 추세 7%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주목해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아마도 통일의 시기에 대한 응답결과일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이 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5.8%로 어떤 가능한 시기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3.7%에 불과, '1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도 13.3%로 작년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임을 말해준다.

통일이 가져다줄 사회 전체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48.6%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50% 수준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이래 5년만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21.8%로 2007년 이후 올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 또는 무용론 견해가 증가한 추세를 감안하면 통일에 대한 집단적·개인적 이익 기대감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통일 무용론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다는 것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실업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문제들—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에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10%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범죄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이 됐을 때 치안 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개선될 것이다'는 응답이 22.3%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투자, 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취업문제에 민감한 젊은 층일수록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 국민의 다수는 통일이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회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또는 효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추진력이 생겨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이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안에는 통일 이후의 국가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는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응답률(평균값 45%)은 크게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은 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평균값 37%). 다시 말해서, 이 응답에는 남한의 현 체제나 북한의 현 체제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통일된 국가에서는 남북한 각각 체제에서 좋은 점들을 절충한 체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응답은 한편으로는, 연합제 또는 연방제와 같은 형태의 통일국가를 의미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응답은 통일을 원하기는 하지만 단일체제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갈등 문제는 회피하고 싶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일회의론 또는 통일무용론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하자는 견해를 증가시키고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 이후에 사회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통일 비용에 대한 남한사회의 과도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와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각각 유지하는 방식의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견해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북한정권의 호전적 행위가 줄거나 남북관계의 대립 국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회의론 또는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통일인식에 대한 국민인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2013
통일의식 조사결과

• 발표 2

북한에 대한 인식

김병로 (IPUS HK교수)

북한에 대한 인식

2013년 한국사회는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첫 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야 정권교체가 갖는 파급력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친이, ‘친박’ 그룹을 형성하며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의 대선정국에서 표출된 박근혜 정부는 강경일변도로 치닫던 이명박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큰 통일을 추구하는 ‘신뢰프로세스’ 제안은 분명히 지난 정부의 대북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년도의 조사에는 지난 5년간 형성되었던 대북인식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작년 12월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 이후 금년 들어 3차 핵실험을 감행(2013.2)하였고 남한과 국제사회에 호전적인 태도를 과시하였다. 지난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간 모든 합의서 전면 무효화를 공언하며 남북간 전면전에 대한 위협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적 행동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종북논란을 매개로 하여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논란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는 국내정치적 논쟁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같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이 2013년 7월 조사에서 북한인식 부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2013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1. 남북한 관계 인식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0.4%로 가장 많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21.3%,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라는 대답은 16.4%,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16.5%,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6% 등이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47.1%→40.4%로 6.7%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작년에 16.8%→10.9%로 5.9% 포인트 감소했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올해 10.9%→16.4%로 5.5% 포인트 늘어났다. 2011년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던 부정적 대북인식이 2013년에 다시 강화되었다.

<그림 1> 남북한 관계 인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의식은 우리 연구원이 통일의식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의식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져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비판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대북인식이 이처럼 다시 증가한 이유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과 비판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김정일 정권 출범과 리설주의 파격 등장, 장성택의 중국방문 등으로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부정적 대북인식이 다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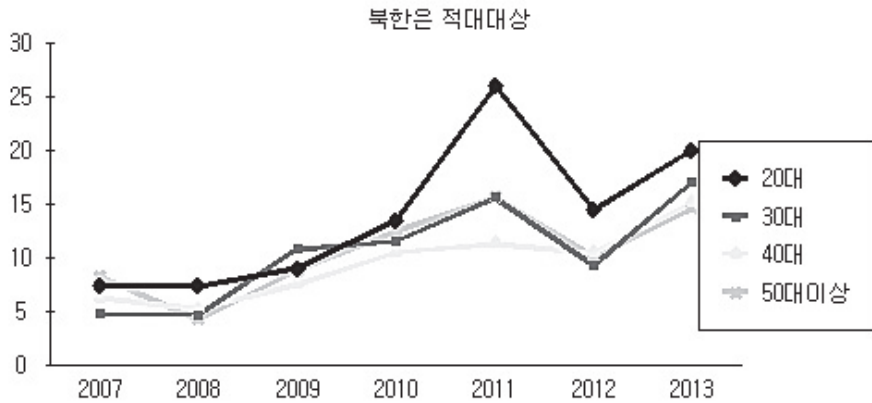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그림 2>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듯이 작년에 30~40대 쪽으로 이동했던 20대 연령층이 다시 이탈하여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47.8%→31.6%로 16.2% 포인트나 낮아졌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인 반면 20대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급격히 철회하였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20대의 젊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되는 남북대립으로 안정을 희구하는 의식이 작년에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형성되었으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의 안보불안이 지속됨으로써 20대 연령층이 30~40대에서 다시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50대이상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낮아졌다. 남북대립과 안보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20대의 대북인식이 비판적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 현상이 올해 다시 강화되었다.

<그림 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북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16.8%(11년)→10.9%(12년)→16.4%(13년)로 다시 높아져 작년에 처음으로 완화되었던 대북 적대인식이 모든 연령층에서 재강화되었다. 특히 2012년에 26%→14.5%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20대의 대북 적대인식이 올해 다시 20.0%로 상승하였다. 작년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대북 적대인식을 갖고 있던 30대 연령층에서도 금년에는 ‘적대대상’ 인식이 9.2%→17.1%로 높아져 가장 가파른 속도로 대북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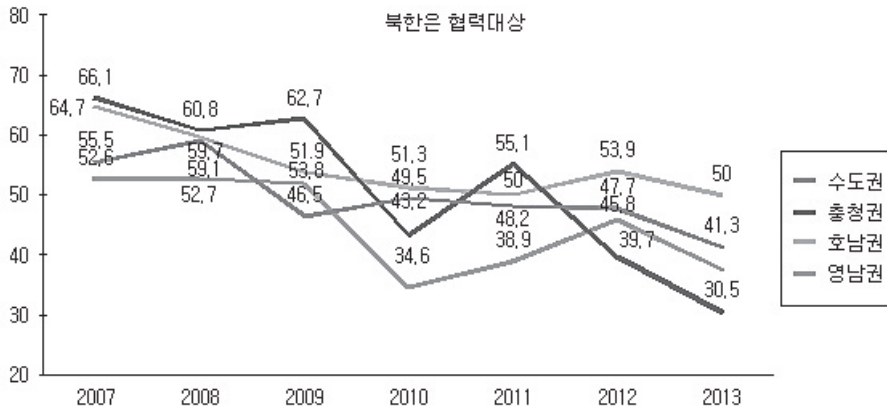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34.2%)<고졸(37.2%)<대재이상(45.5%)로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협력대상' 인식이 높은 것은 예년과 비슷하였으나, 고졸학력자는 '경계대상' 인식이 24.5%로 다른 연령층(중졸 21.1%, 대졸 17.1%)에 비해 높은 반면, '적대대상' 인식(14.4%)은 가장 낮았다(중졸 21.1%, 대졸 17.7%). 성별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에서 남자(38.7%)<여자(42.2%)로 차이가 있을 뿐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은 반면, 블루칼라는 '적대대상'에서, 자영업자는 '경계대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지역별 편차는 조금 벌어졌다. '협력대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충청권(30.5%)<영남권(37.5%)<수도권(41.3%)<호남권(50.0%)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충청권의 낙폭이 39.7%→30.5%로 크게 떨어진 반면,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하락하여 지역별 편차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7년간의 추이를 보면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호남권에서 가장 높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그 뒤를 잇는 순위를 유지하였다. 반면, 충청권은 대북 협력대상 인식의 기복이 매우 컸다. 즉 2007~09년 시기에는 호남권보다도 높은 수준을 협력적 대북인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인 2011년에 대북협력의식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으나, 2012년에 55.1%→39.7%로 크게 낮아진 후 올해 다시 30.5%로 내려앉았다.

〈그림 4〉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종교별 대북인식의 변화도 1년 사이에 크게 요동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기독교(45.7%)과 천주교(43.1%)에서 높고 불교(37.0%)나 무종교(39.6%)에서 낮아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경제대상이나 적대대상, 지원대상 인식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생겨났다. 작년에는 불교인이 북한을 경제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올해는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그러한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불교인은 상대적으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났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주교인은 20.8%로 불교(16.4%), 기독교(15.2%)보다 많았고 '경제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24.5%로 불교(17.2%), 천주교(18.1%)보다 많았다. 반면,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교인이 21.8%로 기독교(14.4%)나 천주교(13.9%)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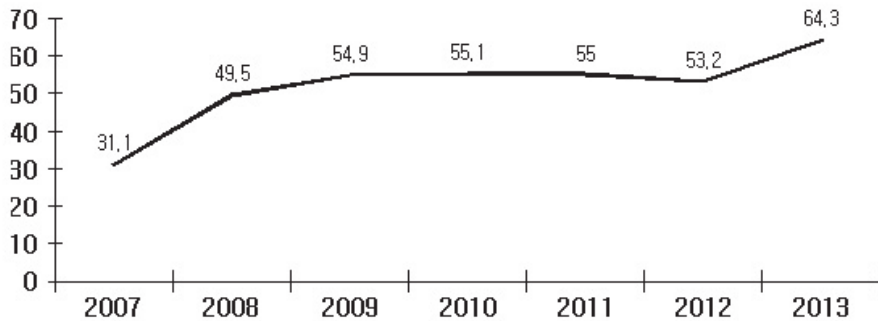
2.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하고 대북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기대하는 만큼 북한사회의 변화나 북한당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과 비판의식이 남한사회에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북한변화’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터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은 64.3%로 “변하고 있다”(35.8%)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53.2%→64.3%로 최근 몇 년간 유지되던 50% 중반 대의 평가가 60% 중반 대로 급상승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식은 2007년 31.1%에서 2008년과 2009년에 49.5%, 54.9%로 상승한 후 55.1%(10년)→55.0%(11년)→53.2%(12년)로 줄곧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올해 64.3%로 급상승한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식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의 북한정권이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안정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1년 사이에 50.9%→57.1%로 늘어났다.

〈그림 5〉 대북 비판의식



연령별로 보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지면서 연령별 차이가 없어졌다. 작년에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올해는 20대 67.6%, 30대 64.7%, 40대 60.7%, 50대이상 64.6%로 세대별 의식에서 통계적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이른바 386 세대로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40대가 전반적인 대북 비판의식 상승 추세 속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의 변화도 현저하였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46.5%)과

영남권(43.6%)에서 높고 수도권(32.4%)은 중간, 그리고 충청권(26.3%)은 가장 낮았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충청권의 변화는 인상적이다. 최근 2년간 영남권(40.5%→50.6%)과 충청권(50.4%→57.8%)의 긍정적 대북의식이 상승하던 추세에서 2013년에 각각 43.6%, 26.3%로 하락하였다. 특히 충청권의 긍정적 대북의식이 57.8%→26.3%로 31.5% 포인트가 급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반적으로 10% 포인트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영남권의 하락은 이해가 되지만, 상승일로에 있던 충청권의 급변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4.3%로 “가능하다”(35.8%)는 응답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4% 포인트 늘어났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40.9%(09년)→34.9%(10년)→34.3%(11년)→39.3%(12년)→35.8%(13년)로 작년에 5% 포인트가 상승하였다가 올해 다시 4% 포인트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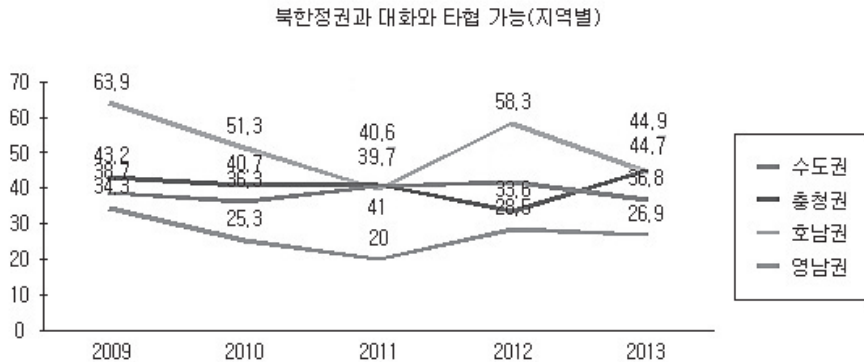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 연령층에서 40.7%로 가장 높고 40대(37.7%), 20대(34.0%), 50대(31.6%) 순으로 낮아진다. 30~40대와 20~50대 두 그룹으로 나뉘던 양상에서 다시 각 연령층별로 의식의 차이가 벌어졌다. 2013년에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타협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아왔던 40대 연령층의 하락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50대이상 연령층에서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20대와 30대 연령층의 하락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령층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그림 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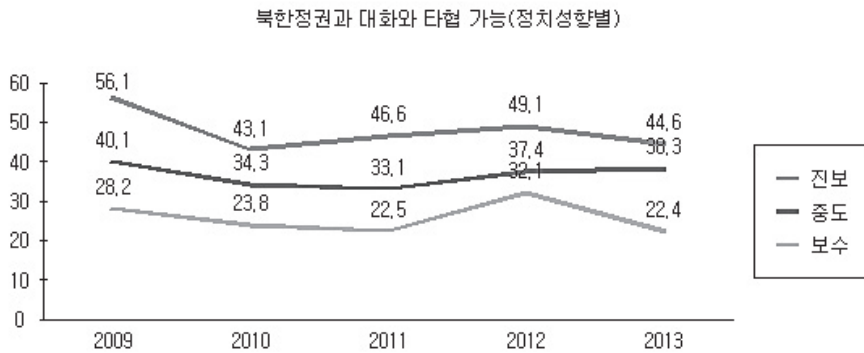
지역별, 정치성향별로도 대북신뢰도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44.9%, 44.7%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고, 수도권(36.8%)과 영남권(26.9%)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북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충청권만 33.3%→44.9%로 11.6% 포인트가 급상승하여 이례적 현상을 보였다. 작년에 18.6%라는 큰 폭으로 상승(39.7%→58.3%)했던 호남권의 대북신뢰도는 다시 44.7%로 떨어졌고, 수도권도 41.6%→36.8%로 하락하였으며, 영남권에서는 28.5%→26.9%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충청권의 대북신뢰가 호남권과는 정반대로 작년에 41%→33.6%로 낮아졌다가 올해 44.9%로 급상승하였다.

〈그림 7〉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신뢰응답이 진보(44.6%)>중도(38.3%)>보수(22.4%)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양상은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단일변수로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유력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진보’는 소폭 감소하고 ‘중도’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보수’는 32.1%→22.4%로 9.7%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보수의 대북불신이 1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림 8〉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4.6%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계열로 보면 2008년에 71.7%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에 83.7%로 12% 포인트가 높아졌고 그 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85.4%→84.6%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무기 보유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4. 북한위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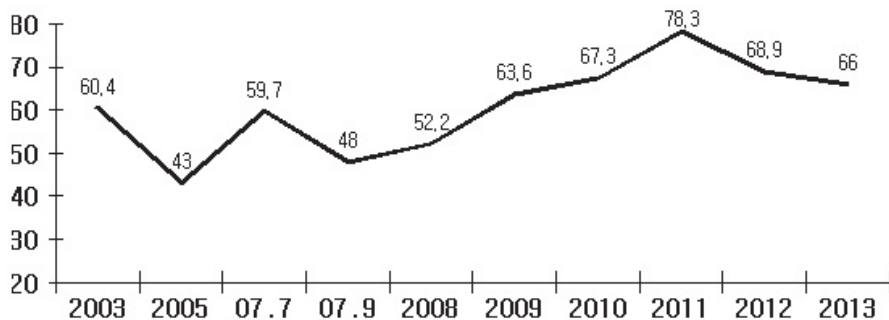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9.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9.1%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73.8%(10년)→80.7%(11년)→80.4%(12년)→78.4%(13년)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위기의식이 금년에는 조금 낮아졌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6.0%로 ‘없다’(34.0%)는 응답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던 2011년(78.3%) 이후 작년에 10% 포인트가 낮아졌고 올해 다시 3% 포인트가 떨어졌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북한발 안보불안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그림 9〉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세대별로 보면, 20~30대와 40~50대가 확연하게 양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대는 74.8%, 30대는 70.5%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 40대(59.0%)와 50대이상(62.4%)은 낮게 보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30대 연령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작년에는 30대 연령층이 40·50대와 인식을 같이 했고 20대만 높은 불안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반해 올해는 30대가 40·50대 그룹에서 이탈하여 20대 쪽으로 이동하였다. 30대의 안보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2013년 3월에 고조시킨 불안정국에서 4050대는 북한의 전형적인 위협전술이라 생각하여 별 영향을 받지 않은데 비해 30대 연령층은 올해들어 북한의 위협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데 영향을 받아 그것을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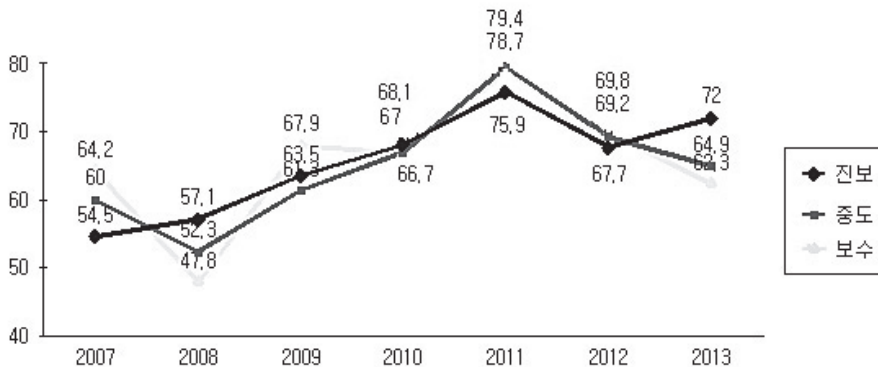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중부권(73.7%)이 가장 높고 호남권(69.3%)과 수도권(68.4%)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영남권(57.7%)은 가장 낮은 수치, 즉 북한발 안보불안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중부권과 호남권은 북한발 안보불안이 높아졌고 수도권과 영남권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권으로의 권력교체가 발생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충돌이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중부권과 호남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불안한 대북정책이 자칫 북한으로부터의 무력도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가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서는 북한발 안보불안이 높아진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낮아져 비슷한 현상이 재연되었다.

〈그림 11〉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도 정권교체기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2012년에는 보수(69.8%)와 중도(69.2%)가 진보(67.7%)보다 안보불안을 더 강하게 느낀 반면, 2013년에는 진보(72.0%)가 중도(64.9%)와 보수(62.3%)보다 훨씬 안보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났었는데, 올해에도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즉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진보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칫 잘못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안보불안이 더 야기될 것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는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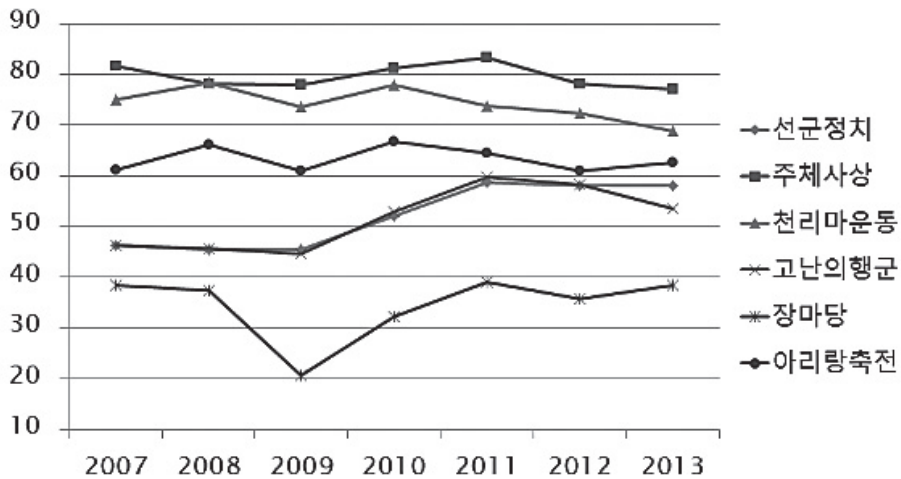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3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북한 인지도를 기록했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2012년에 2.6% 포인트 하락한 후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과 2012년에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들이 북한의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3> 북한사회 인지도



구분/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군정치	46.2	45.4	45.4	52.1	58.8	58.1	58.1
주체사상	81.7	78.2	78.0	81.2	83.2	78.2	77.1
천리마운동	75.0	78.3	73.6	77.9	73.8	72.4	68.9
고난의 행군	46.2	45.7	44.7	53.0	59.7	58.3	53.6
꽃잡이/장마당(09~)	38.4	37.5	20.6	32.3	39.1	35.8	38.4
아리랑축전	61.2	66.2	61.0	66.7	64.4	60.9	62.6
평균	58.1	58.6	53.9	60.5	63.2	60.6	59.8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자는 4.3%(11년)→4.1%(12년)→3.4%(13년), 대북지원활동이나 단체 참여 경험도 2.0%(11년)→1.4%(12년)→1.3%(13년)로 감소하였고,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 본 사람들은 46.2%(09)→37.4%(10)→31.5%(11년)→32.3%(12년)→27.3%(13년)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한편,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0.9%(09년)→13.8%(10년)→16.2%(11년)→19.0%(12년)→21.8%(13년)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1.4%), 생활수준(94.9%), 역사인식(84.3%), 언어사용(85.3%), 생활풍습(85.8%), 가치관(91.9%)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91.9%(11년)→90.6%(12년)→88.9%(13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남북간에 전반적으로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소결

첫째, 2013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 재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2011년을 정점으로 내려가는 듯 보였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는 기세로 돌아섰다. 북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40.4%로 조사가 시작된 이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의식은 10.9%에서 16.4%로 5.5% 포인트 다시 높아졌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식도 53.2%→64.3%로 급상승하였고,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39.3%→35.8%로 3.5% 포인트 떨어졌다.

둘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낙폭은 미미하였다. 2011년에 78.3%로 최고조에 달했던 북한발 안보불안과 우려가 작년에도 68.9%로 낮아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66.0%로 2.9% 끌어내리는데 그쳐 10% 포인트 정도로 낮아지던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정체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은 가장 낮을 때 40%, 가장 높을 때 60%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66%의 안보불안 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아직도 안보불안은 평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의식이 다시 부정적비판적으로 변화한 데는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움직임이 크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20대 연령층이 작년에 30~40대 연령층 집단에 편입되었으나 올해에는 다시 이탈하여 50대이상 연령층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0대의 대북의식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30~40대로부터 이탈하여 50대이상과 궤적을 함께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30~40대 그룹으로 이동하여 2010년 이전과 같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올해 20대는 50대이상의 연령층보다 더 비판적인 대북인식의 지점으로 떨어져 나갔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30대 연령층까지 ‘비판적’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30대 연령층이 기존의 40~50대 그룹에서 이탈하여 20대와 함께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적대대상’ 의식에서도 30대 연령층이 가장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는 부정적 대북의식을 표출하였다.

넷째, 북한인식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랐다. 북한의 존재인식과 북한의 변화, 정권 신뢰도 등 여러 영역에서 진보는 보수보다 북한에 대해 더 긍정적,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진보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인식의 비율이 높고 ‘적대대상’ 비율이 낮았으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즉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대북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이념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쟁의 핵심이 여전히 대북문제이며 북한정권을 신뢰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을 지닌다.

다섯째,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올해의 대북 협력대상 의식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호남권의 우세는 금년에도 유지되었으나, 작년에 유일하게 급락했던 충청권의 대북우호의식은 55.1%(11년)→39.7%(12년)→30.5%(13년)로 올해에도 대폭 떨어졌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불안의식도 충청권은 54.3%→73.7%로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호남권과 함께 높은 안보불안감을 표출하였다. 영남권과 수도권이 안보에서 안정감을 찾은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높은 안보불안감을 나타냈다. 반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다른 모든 지역이 하락한 반면 충청권만은 33.6%→44.9%로 급상승하여 대조적이었다. 영남권과 수도권보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 갖고 있다. 충청권의 이러한

의식의 출렁임은 최근 요동치는 남북관계와 북한발 사건에 충청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충청권의 이러한 변화가 세종시 건설과 정부정책 등 국내정치와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금년 조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이념과 지역 변수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효과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작년에는 '진보'가 '보수'보다 그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올해에는 '보수'는 69.8%→62.3%로 낮아진 반면 '진보'는 67.7%→72.0%로 높아졌다. 즉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수'는 안보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반면, '진보'는 불안감을 더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념지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2008년에도 매우 유사하게 전개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2013년의 대북인식은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적 발언이 야기됨에 따라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주요 변인은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 비판적 대북의식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충청권의 급격한 안보불안 상승 등 세대와 지역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30대와 충청권이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안보불안감을 높게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높은 신뢰를 보이는 양면성을 드러냈다. 이는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에 20~30대 연령층과 충청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성이 '보수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핵실험과 전면전쟁 선언 등 북한의 극단적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3
통일의식 조사결과

• 발표 3

대북정책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대북정책

1.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7.6%가 만족한다고 응답

- 만족하는 층을 세대별로 보면 20~40대가 50% 중반대로 수렴되는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은 63.8%를 기록

- 만족하는 층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권(76.9%)>영남권(68.9%)>중부권(61.0%)>수도권(56.1%)이 50%를 넘어선 반면 강원권(37.1%)>호남권(35.1%)은 40%에 미달

※ 지난해부터 제주·강원권을 제외하면 수도권·중부권·영남권과 호남권이 대립하는 구도로 지역 여론이 분화되는 양상

- 만족하는 층을 학력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만족도가 60% 전후로 수렴되는 반면 대재 이상은 50% 초반대로 차별화

- 한편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양상도 지속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은 70.1%,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층은 52.8%를 시현

○ 현안 이슈와 관련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만족하는 층이 불만족층보다 북핵을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7.9%) 북핵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율도 높음(+9.6%)

- 만족하는 층의 경우 개성공단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2.4% 감소(불만족하는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율은 0.5% 감소)

-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오차 범위(± 2.8) 이내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만족하는 층이 북핵 종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신장을 가장 선호하고, 만족하지 않는 층의 경우 만족하는 층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과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음
 - 만족하는 층이 만족하지 않는 층에 비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3.6, 북한 개혁개방 및 인권개선 +2.1,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0.0, 북핵 종단 위한 국제협력 +3.0, 평화협정체결 -1.6의 차이를 보임

2.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

-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에서 군사적 긴장해소>북한의 인권 개선>북한 개혁개방>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 순으로 시급하다고 인식
- 대북지원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2007년 조사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07년 49.6%→2013년 40.4%)
- 주요 현안 및 주장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의 경우 지난해보다 증가(+4.6%)한 가운데 세대별로는 40대에서 최고(56.4%), 20대에서 최저(41.2%)를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급증(+13.5%)한 반면 호남권에서는 하락(-7.3%)
 -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의 경우 57.4%가 찬성하여 절반 이상이 관광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보다 감소(-5.1%)한 가운데 세대별로는 40대(60.0%)와 50대(59.5%)가 최고치를 보인 반면 20대(51.6%)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만 4.4% 증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찬성의 경우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가운데 모든 세대가 50% 중반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6.7%), 영남권(+9.3%), 강원권(+12.6)과 중부권이 50%를 상회한 가운데 40% 대를 보인 호남권도 14.2% 증가하였으며 제주권만 7.6% 감소
- 한국의 핵무기 보유의 경우 52.4% 찬성한 가운데 세대별로는 40대>50대>30대>20대 순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최고(64.9%)를 보였으며 수도권(48.2%)과 제주권(46.2%)은 50% 미만을 기록하였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며 새누리당을 지지할수록 찬성비율 높음

○ 최우선 대북정책으로는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평화협정체결 순으로 선호

- 세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20대, 30대, 50대 이상은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을, 40대는 북한 변화를 우선시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을, 중부권과 호남권은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강원권은 북한 개혁개방과 평화협정체결을, 제주권은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우선시
-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월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이 북핵 중단 국제협력을, 400만원 이상의 경우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상대적으로 우선시
 - ※ 600만원 이상의 경우 북한개혁개방과 인권개선(36.4%),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23.4%)을 우선시
-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만족과 관련해서는 만족하는 층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34.7%), 만족하지 않는 층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우선시(28.9%)

3.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

○ 북한 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 최우선 대북정책별로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평화협정체결>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순으로 동의하였음

-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과 관련 안정화에 동의하는 않는 경우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찬성 비율이 급증(각각 +13.6%와 16.9%)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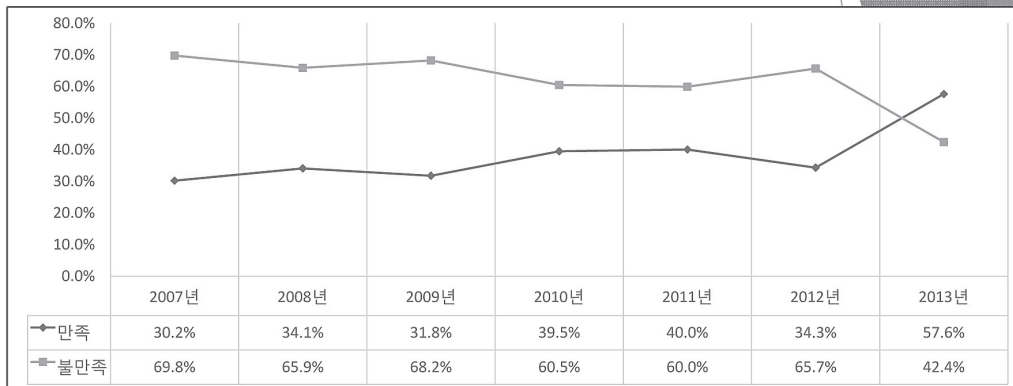
※ 안정화에 동의하는 경우는 찬성률이 지난해보다 3.8% 증가

-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안정화에 동의하는 경우의 찬성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1.3% 높음

○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질문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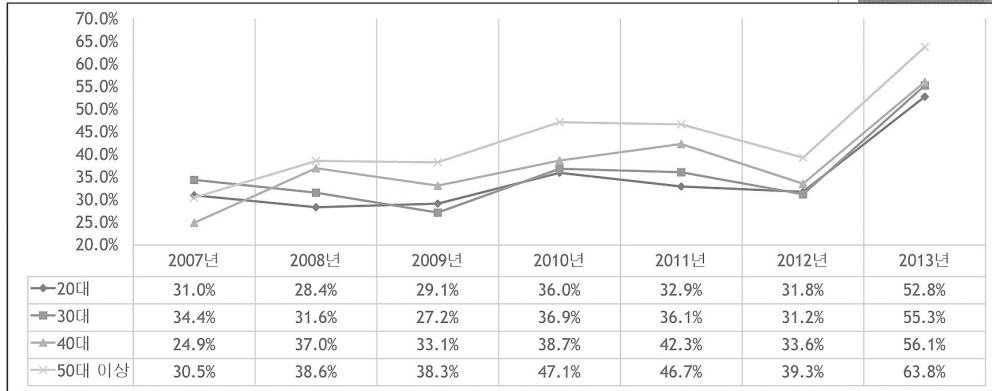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개성공단 유지(+14.5%)와 금강산관광 재개(+24.1%) 찬성 비율 높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찬성 (+15.7%) 비율이 높음

1-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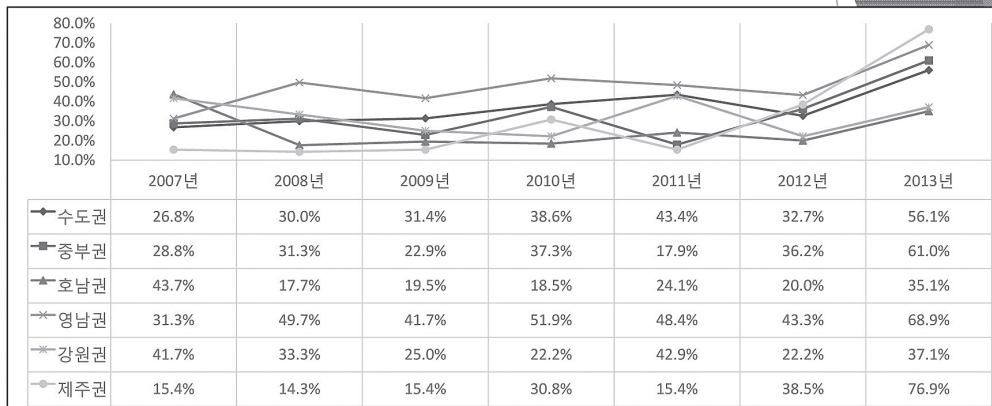
○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섬

1-2.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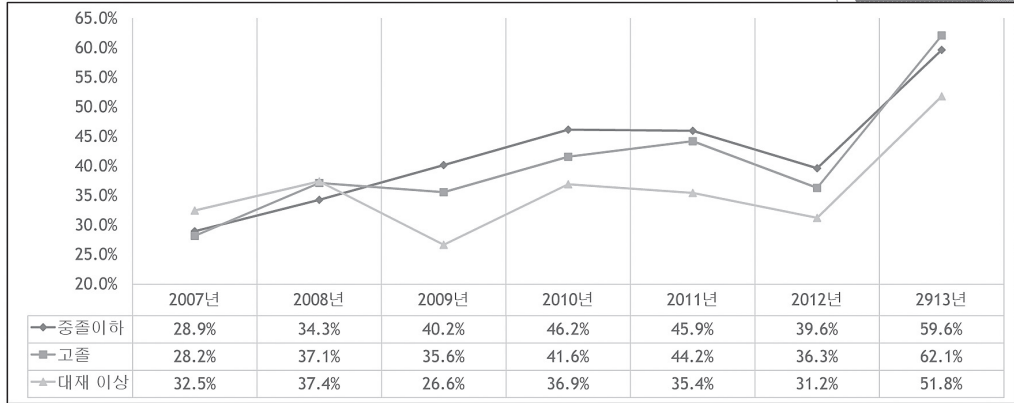
-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60%를 넘어선 가운데
- 20-40대의 만족도가 50% 중반으로 수렴되는 양상

1-3.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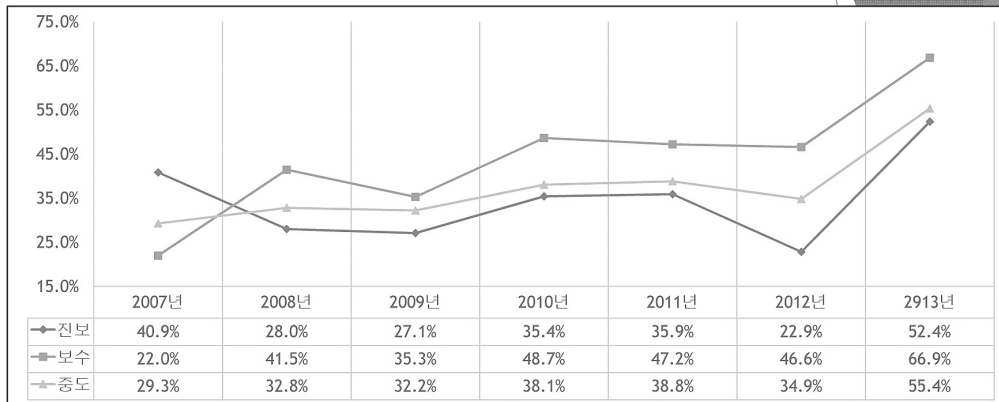
- 제주권>영남권>중부권>수도권>강원권>호남권 순으로 높음
- 지난해부터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하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vs 호남권 대립 양상

1-4.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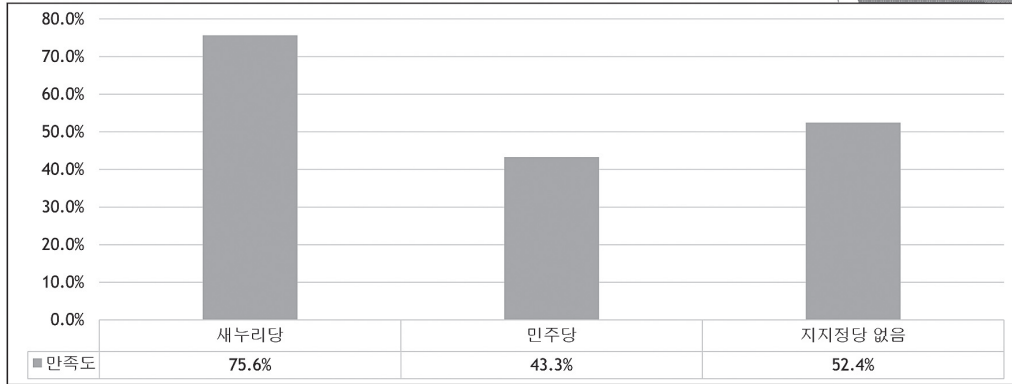
○ 2009년부터 대학 재학 이상이 고졸보다 5~10% 정도 낮은 추세

1-5.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정치성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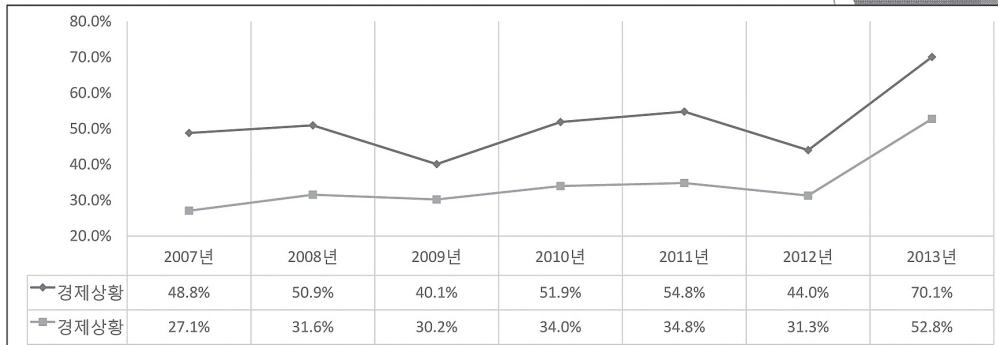
○ 2008년부터 보수와 진보가 역전된 추세 지속

1-6.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다는 층도 5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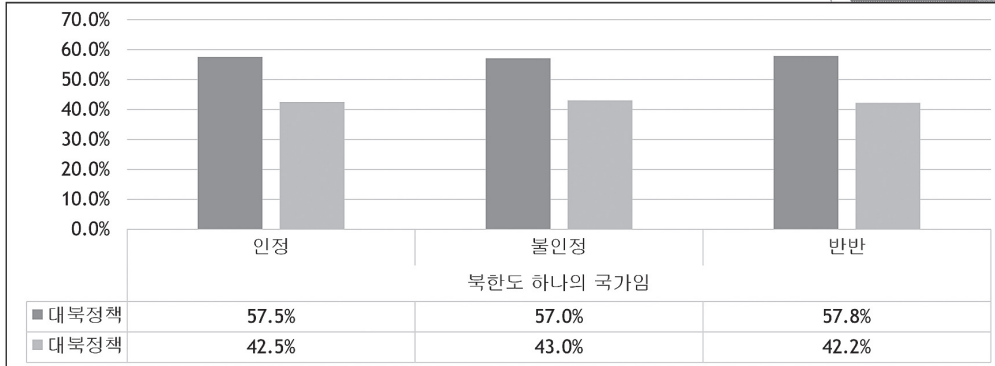
1-7.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한국경제 상황 만족도별



○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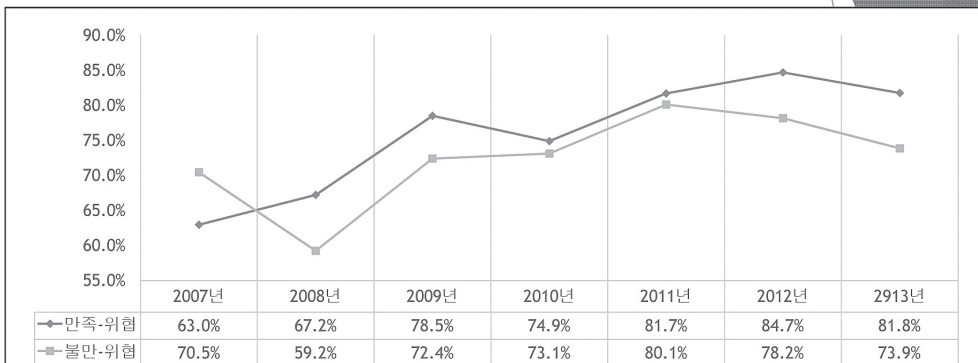
* 경제상황 만족도는 세대, 지역, 교육수준, 소득, 정치성향과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없음

1-8.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북한 국가 인정 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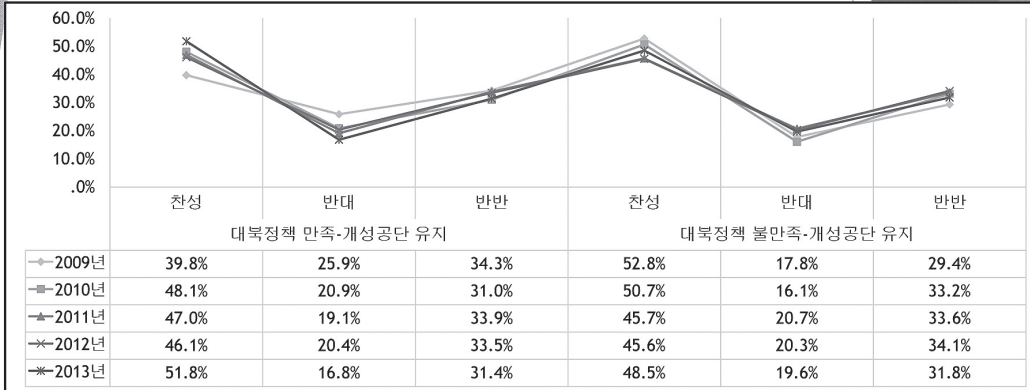
○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대북정책 만족도는 50% 중후반대로 수렴

1-9.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핵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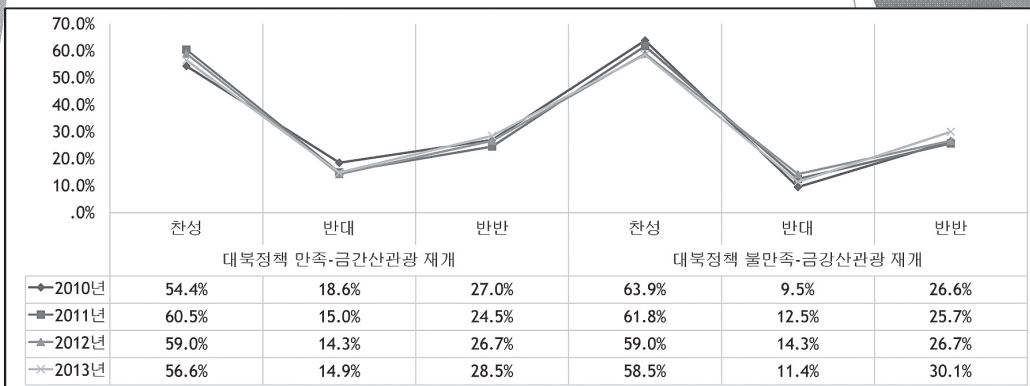
○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불만족 응답자들보다 북핵을 더 위협적이라고 인식

1-10.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개성공단 유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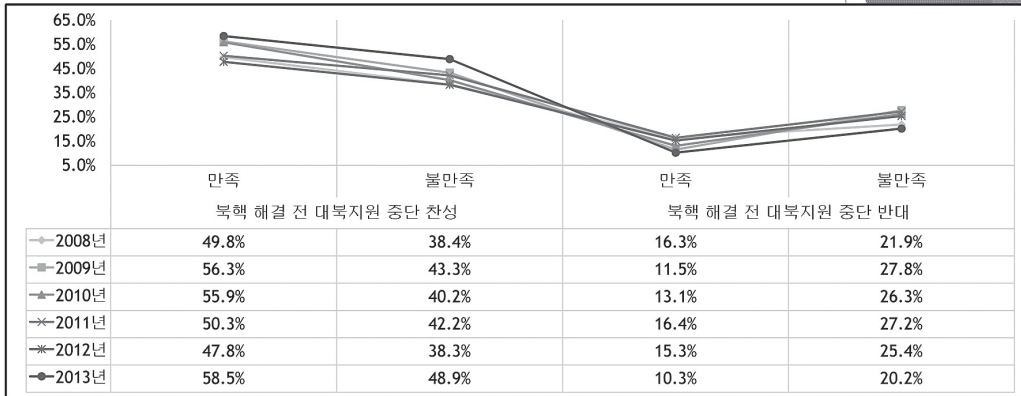
○ 대북정책에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응답자의 50% 전후가 개성공단 유지에 찬성

1-1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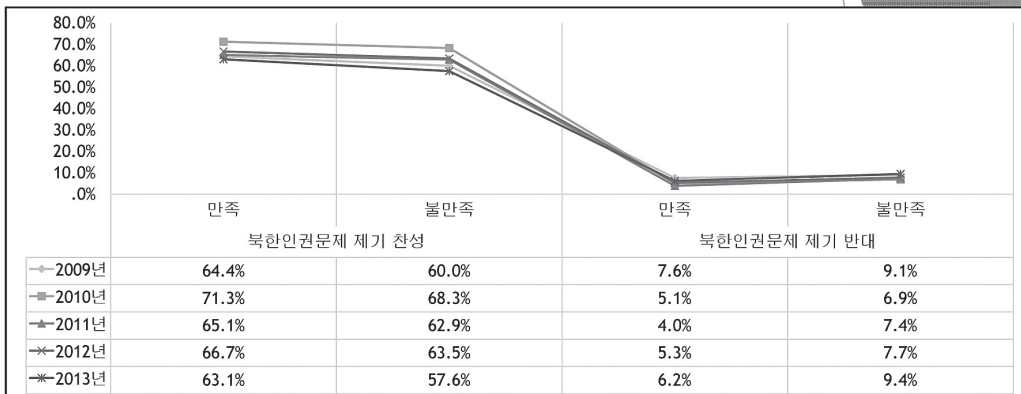
○ 대북정책 만족도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북정책에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응답자의 60% 전후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

1-12.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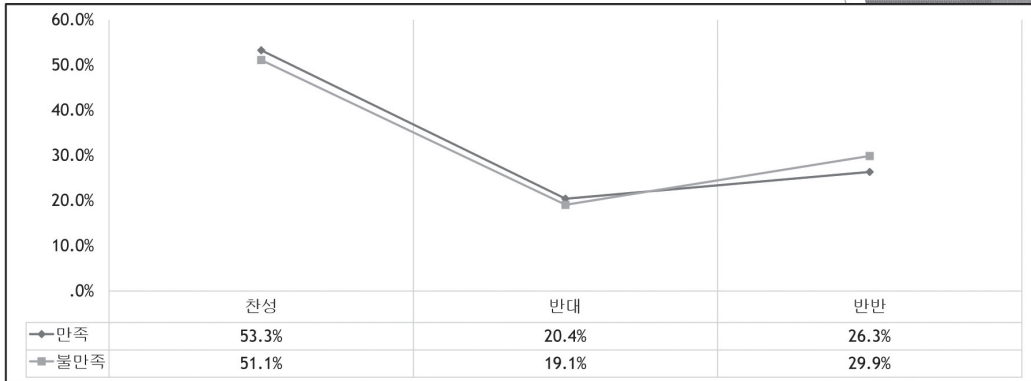
○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9.6% 높음

1-13.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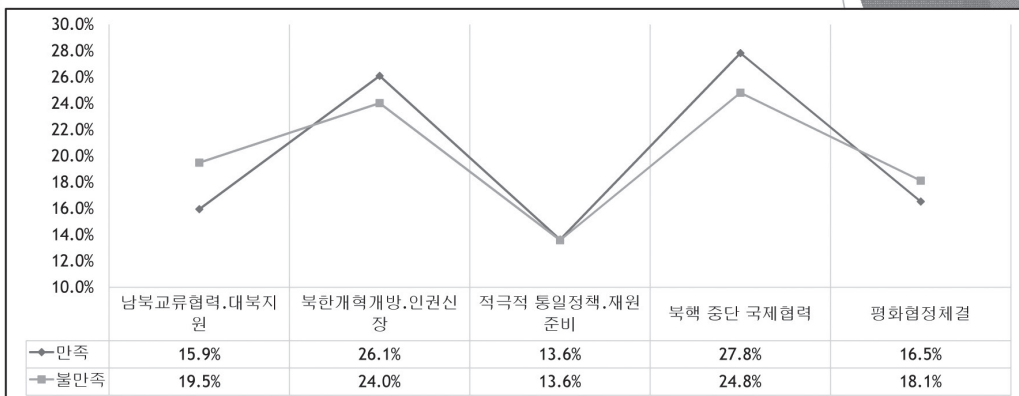
○ 2009년 조사 이후 만족하는 경우 찬성 비율 높고, 불만족 하는 경우 반대 비율 높은 양상 지속

1-14.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



○ 대북정책에 만족하든 하지 않든 50% 이상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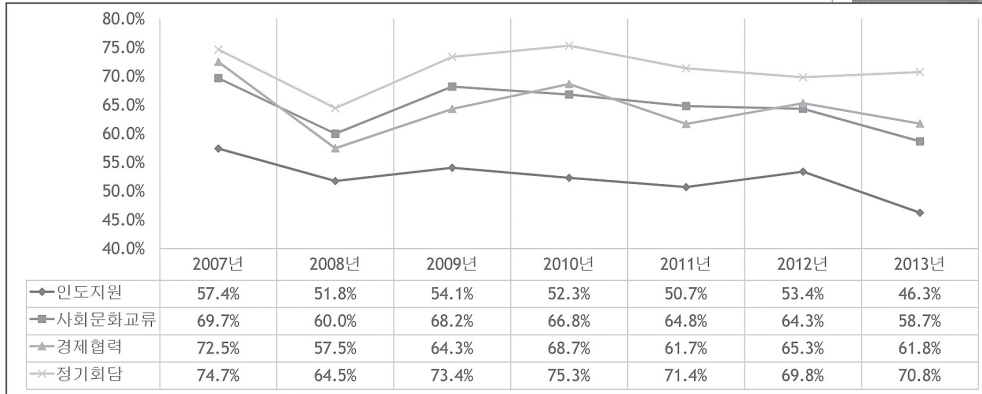
1-15.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최우선 대북정책



○ 대북정책에 만족하든 하지 않든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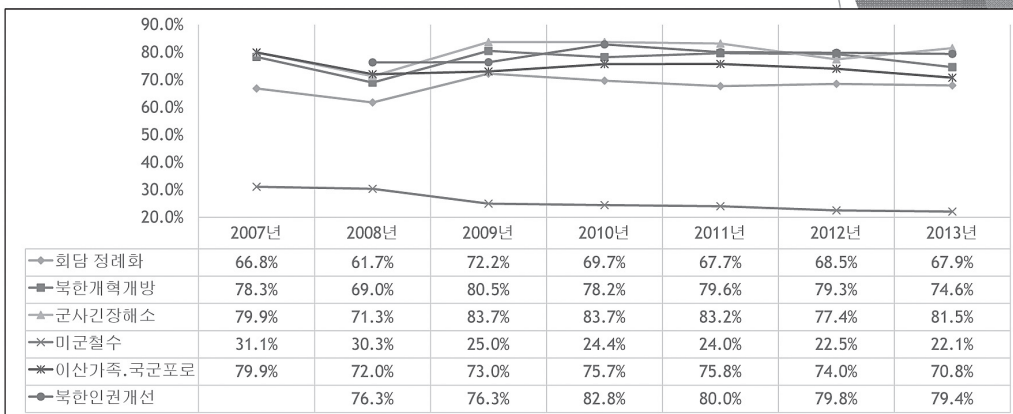
* 만족-교류협력.지원: -3.6, 북개혁개방.인권개선 2.1, 통일정책 0.0, 북핵 중단 국제협력 3.0, 평화협정체결 -1.6

2-1. 통일을 위한 분야별 기여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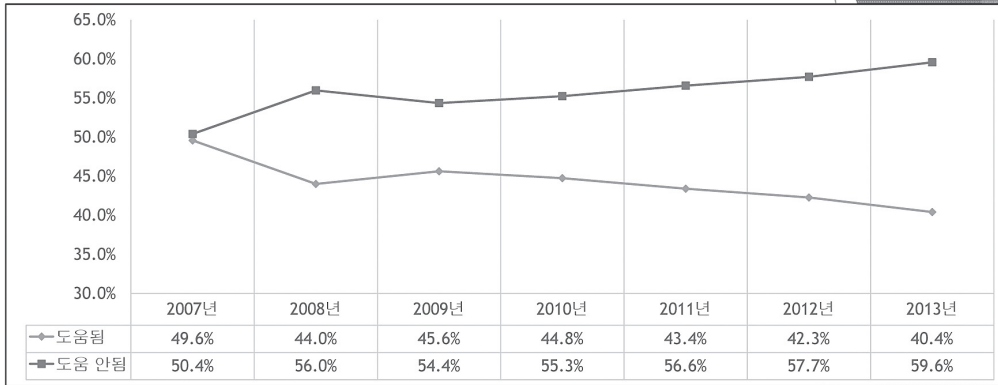
○ 당국 간 정기회담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인도지원은 가장 낮게 평가

2-2.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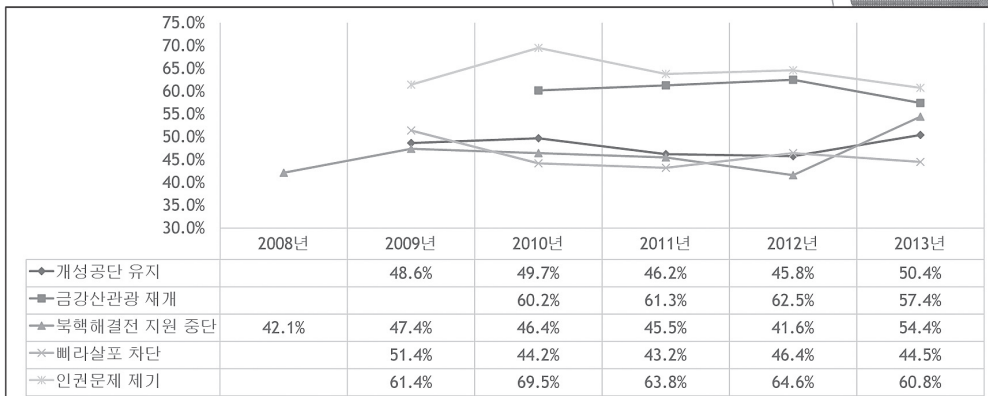
○ 군사적 긴장해소>북한의 인권 개선>북한 개혁개방 순으로 시급하다고 인식

2-3. 북한 주민생활에 대한 대북지원의 효용성



○ 2009년 이후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2-4.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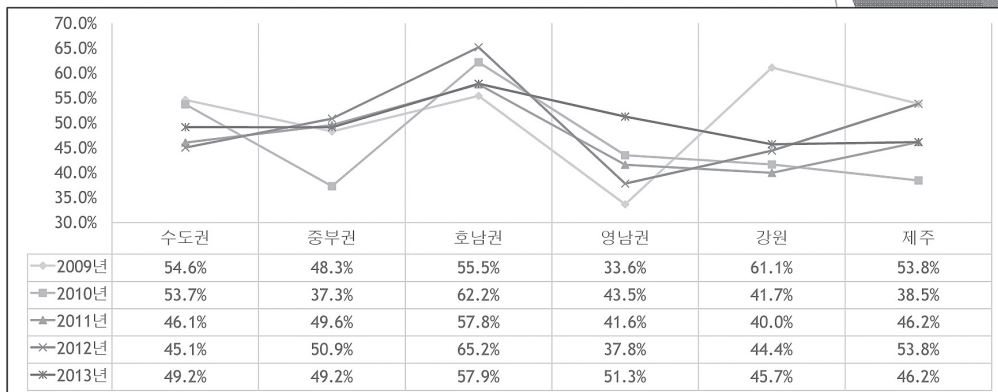
○ 개성공단 유지(2012년보다 +4.6%), 금강산관광 재개(2012년보다 -5.1%)가 50%를 상회
○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과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도 각각 54.4%와 60.8%를 차지

2-4-1. 개성공단 유지-세대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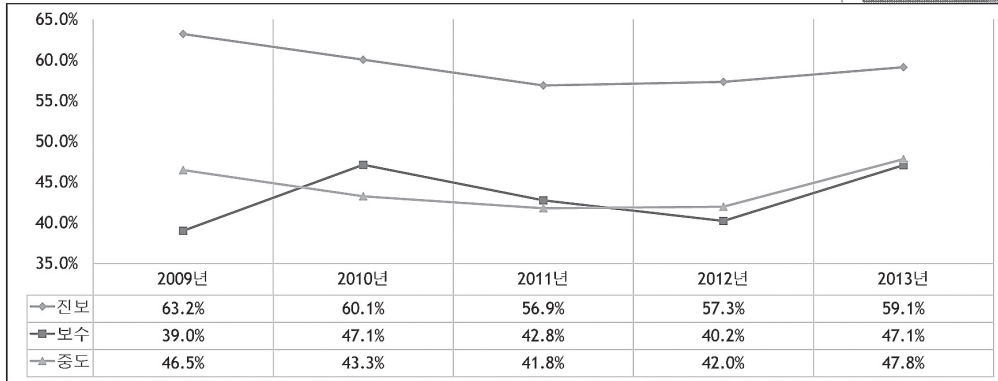
○ 20대와 30대가 50% 미만인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50% 중반대를 기록

2-4-1. 개성공단 유지-지역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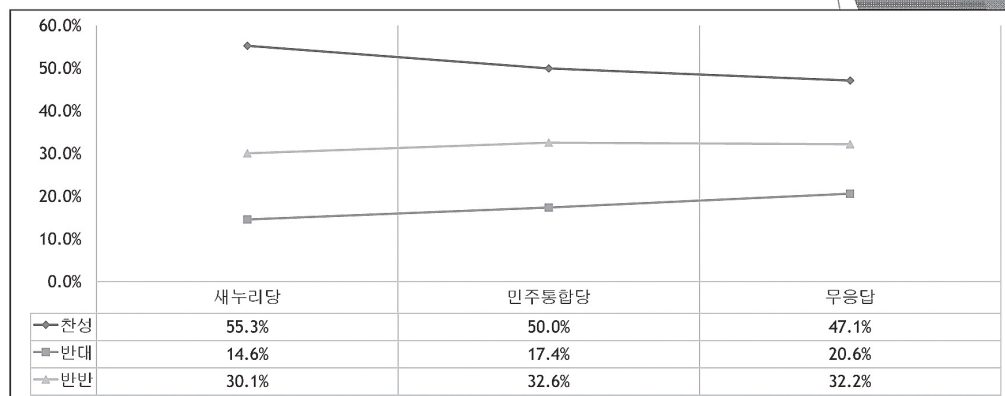
○ 수도권이 약간 증가(4.1%)하고 영남권이 급증(+13.5%)한 가운데 호남권은 하락(-7.3%)

2-4-1. 개성공단 유지-정치성향별 찬성 비율



○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중도층과 보수층이 수렴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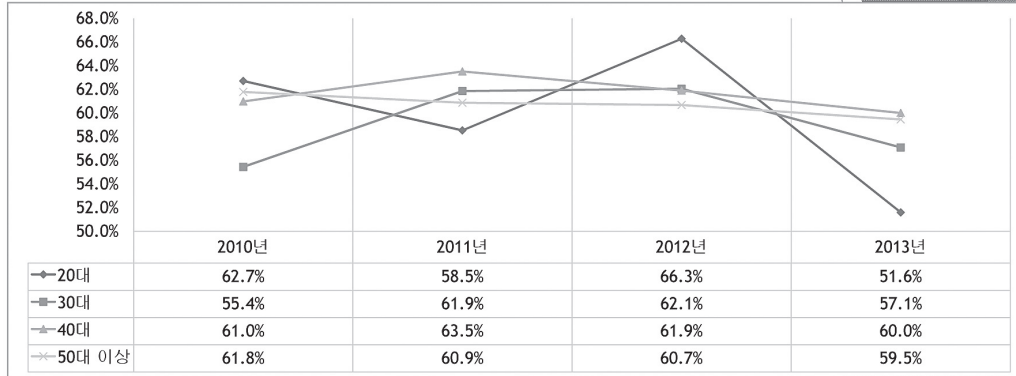
2-4-1. 개성공단 유지-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 새누리당의 찬성 비율이 민주당보다 5.3%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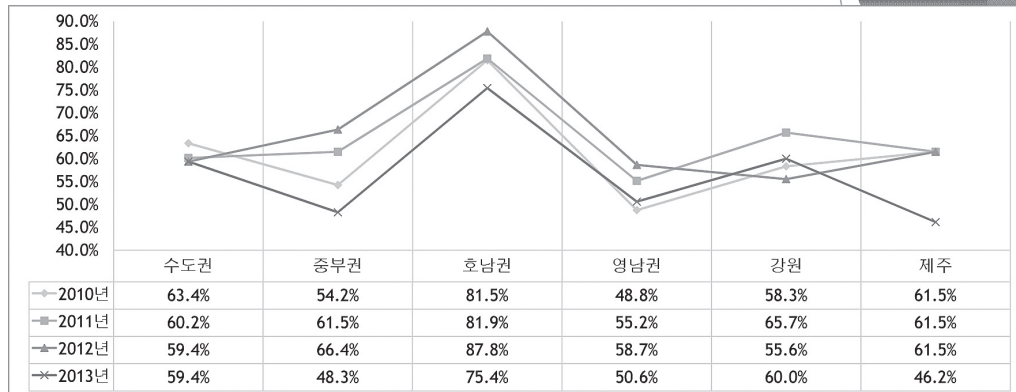
○ 반면 오차범위 이내지만, 민주당의 반대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2.8% 높음

2-4-2. 금강산관광 재개-세대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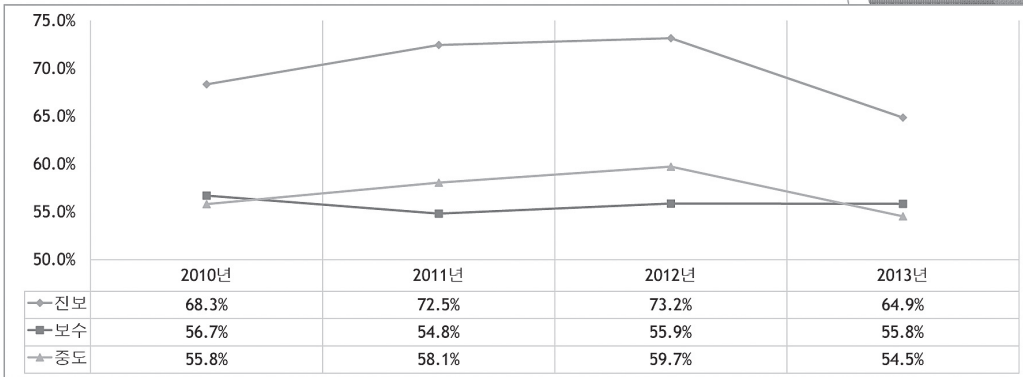
○ 모든 세대가 50%를 넘어선 가운데 20대는 50% 초반, 나머지 세대는 50% 후반으로 수렴

2-4-2. 금강산관광 재개-지역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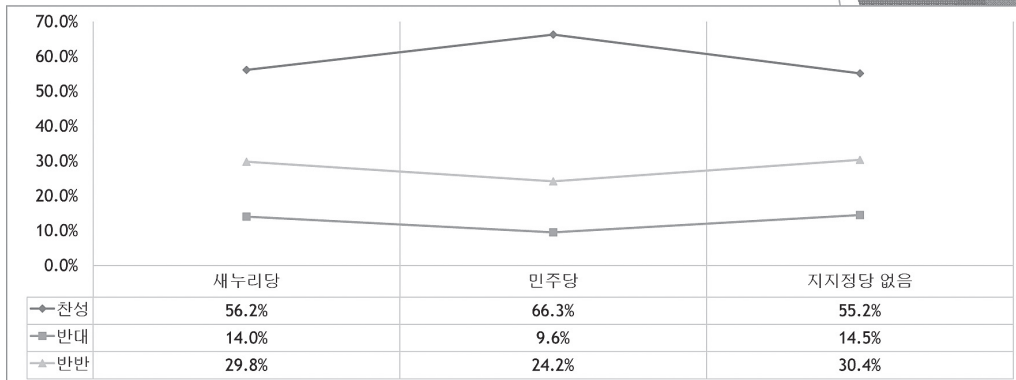
○ 강원권(+4.4%)과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 호남, 영남, 제주는 모두 감소
○ 특히 중부권과 제주권은 찬성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2-4-2. 금강산관광 재개-정치성향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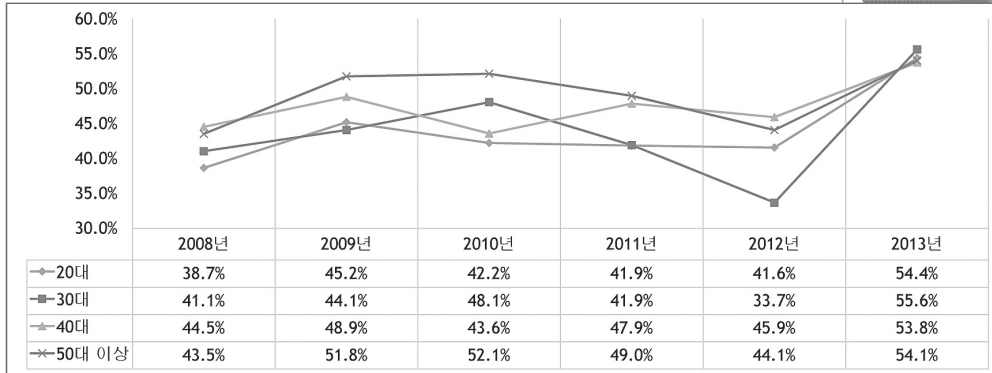
○ 진보층의 감소(8.3%)가 두드러진 가운데 보수층과 중도층이 수렴되는 양상

2-4-2. 금강산관광 재개-지지정당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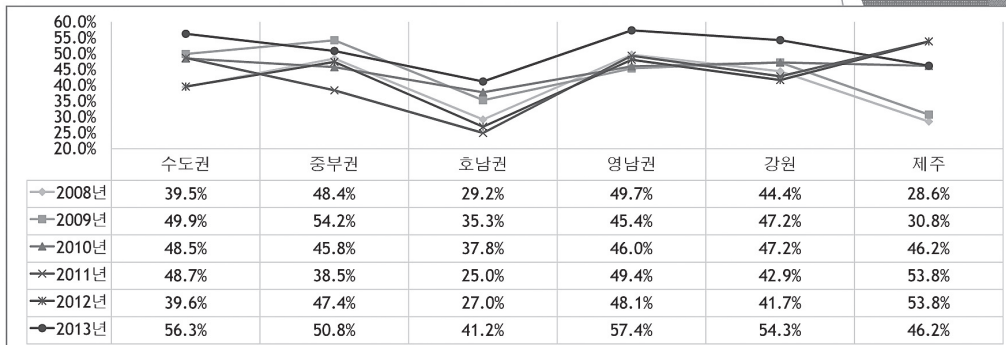
○ 새누리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도 관광재개에 찬성

2-4-3.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세대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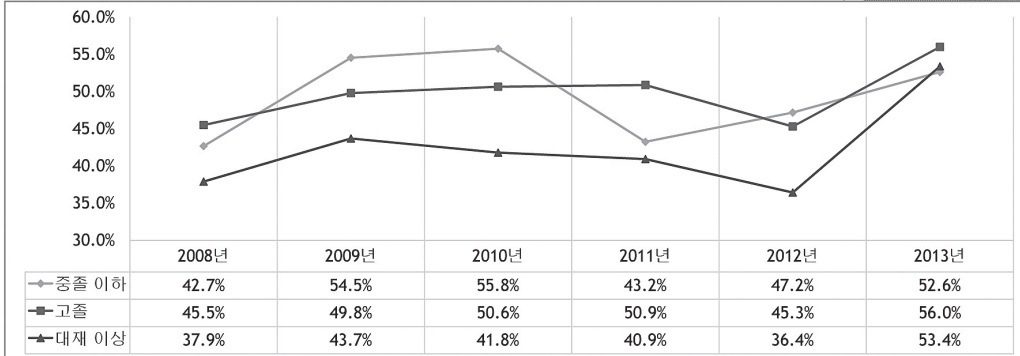
○ 모든 세대가 50% 중반으로 수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

2-4-3.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지역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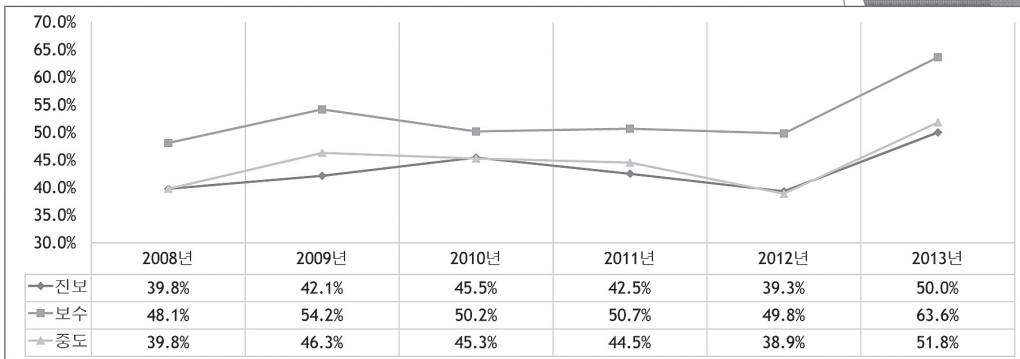
○ 수도권(+16.7%), 영남권(+9.3%), 강원권(+12.6)과 중부권이 50%를 상회
○ 호남권도 지난해보다 14.2% 증가, 다만 제주권만 7.6% 감소

2-4-3. 복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교육수준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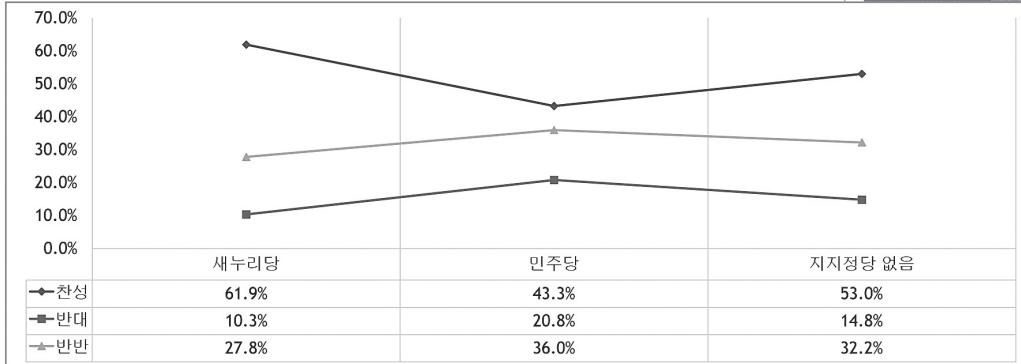
- 지난해보다 대재 이상(+17%)과 고졸(+10.7%)에서 크게 상승
-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중졸 이하(+5.4%)와 함께 전체적으로 50% 초중반으로 수렴

2-4-3. 복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정치성향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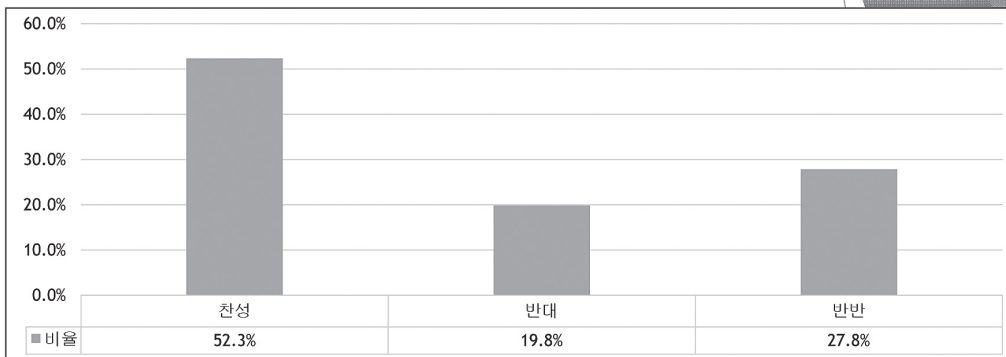
- 진보층(+10.3%), 보수층(+13.8%), 중도층(+12.9%) 모두 50%를 상회
- 보수층이 높은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이 비슷한 추세 지속

2-4-3.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지지정당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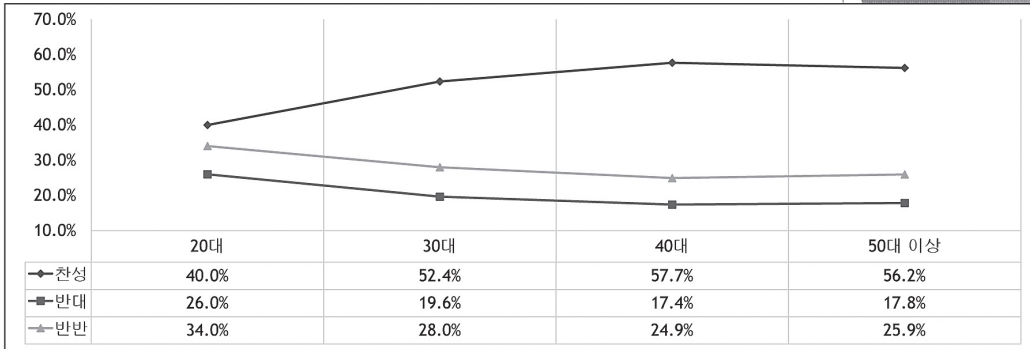
○ 새누리당의 찬성 비율이 민주당보다 18.6% 높아, 지지정당 간 상당한 인식차 표출

2-5.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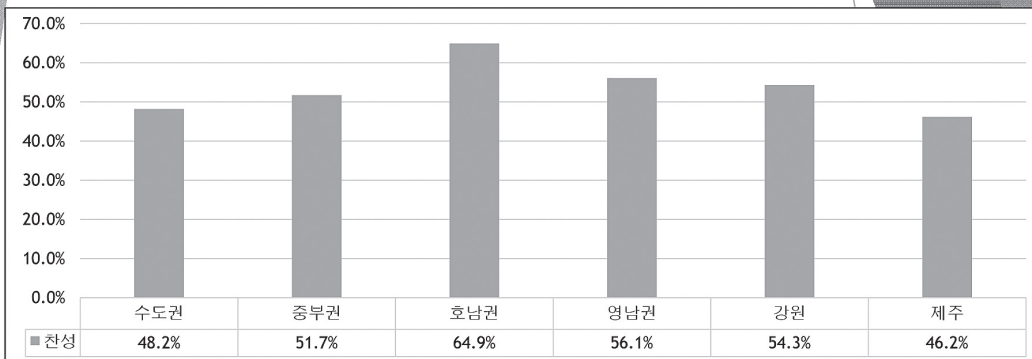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
 * 북한의 핵실험(2.12) 직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2.20) 64%가 찬성

2-5-1. 한국의 핵무기 보유-세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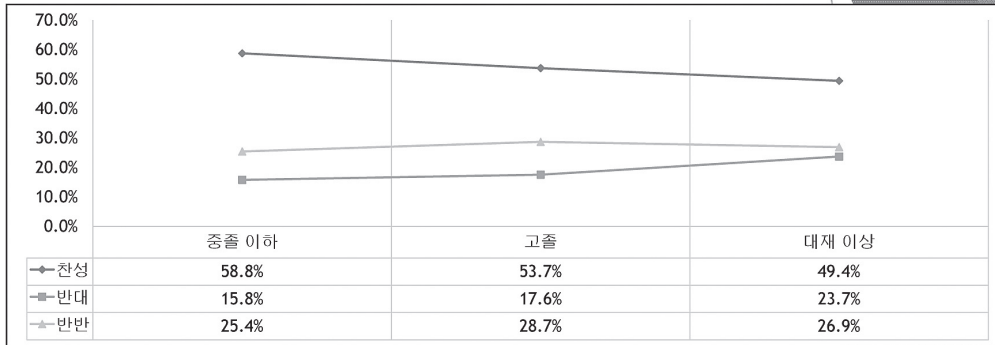
○ 40대 이상이 50% 중반대로 수렴되는 가운데 30대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
○ 20대의 경우 40%로 다른 세대와의 인식차이를 표출

2-5-2. 한국의 핵무기 보유-지역별 찬성 비율



○ 호남권>영남권>강원권>충부권이 50% 이상인 반면 수도권과 제주권은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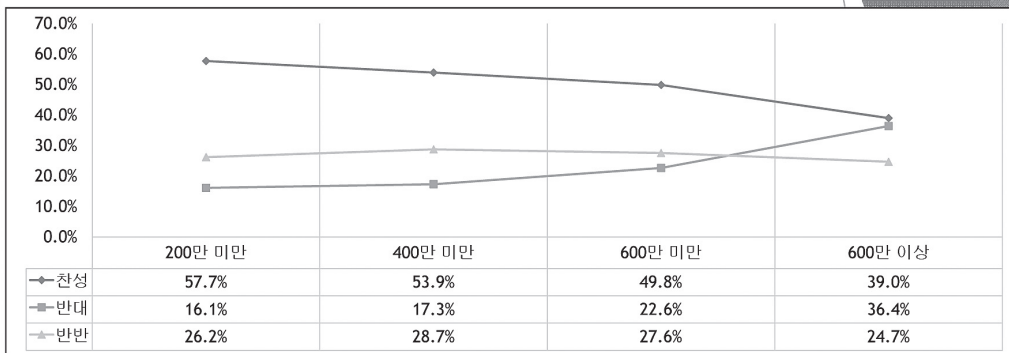
2-5-3. 한국의 핵무기 보유-교육수준별 응답 비율



○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찬성 비율이 높음

○ 찬성의 경우 중졸과 대재 이상 간 9.4%, 반대의 경우도 7.9%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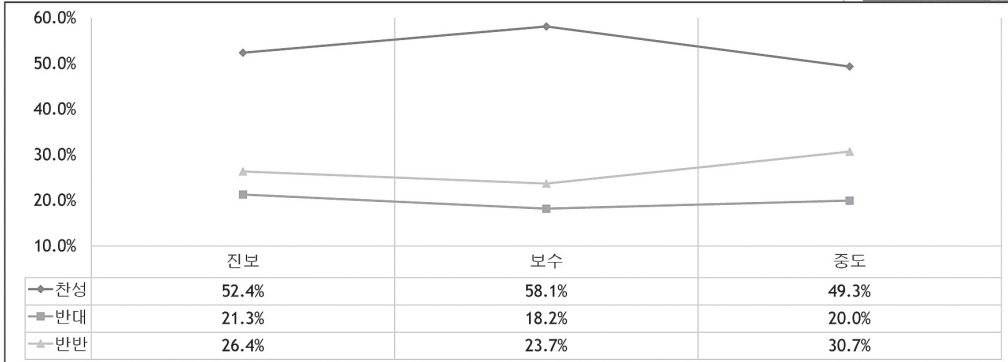
2-5-4. 한국의 핵무기 보유-월 가구소득수준별 응답 비율



○ 소득이 낮을수록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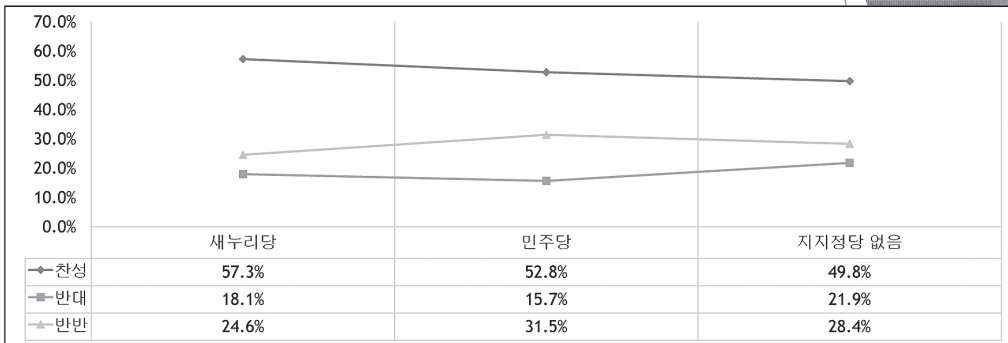
* 가구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보다 찬성 비율이 18.7% 낮고 반대 비율은 20.3% 높음

2-5-5. 한국의 핵무기 보유-정치성향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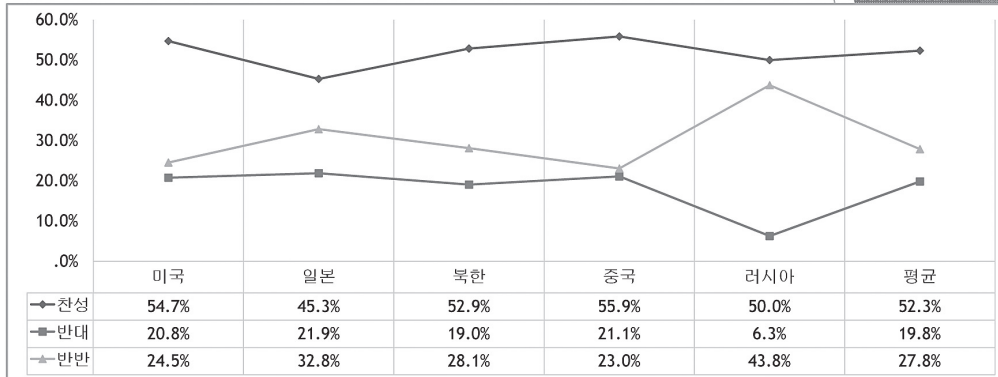
-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진보층보다 5.7% 높음
- 보수와 진보 모두 50% 이상 찬성을 보이는 가운데 중도층도 절반 정도가 찬성

2-5-6. 한국의 핵무기 보유-지지정당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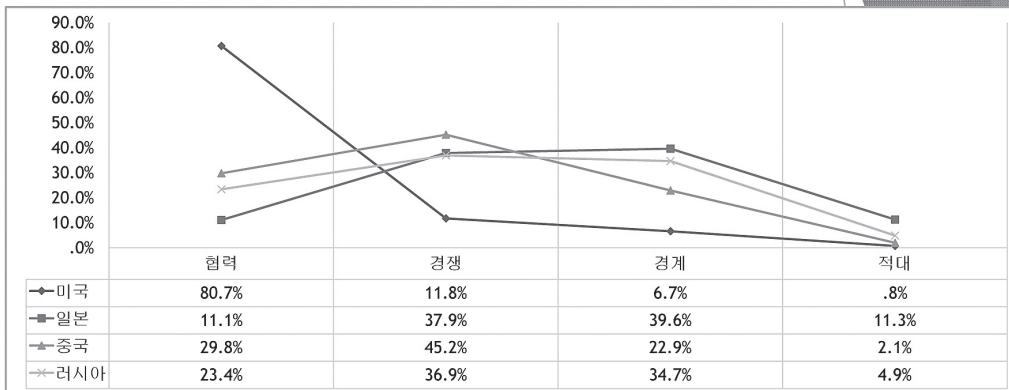
- 새누리당 지지층의 찬성비율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4.5% 높음
- 양당 지지층 모두 50% 이상 찬성,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도 절반 정도가 찬성

2-5-7. 한반도 평화위협 국가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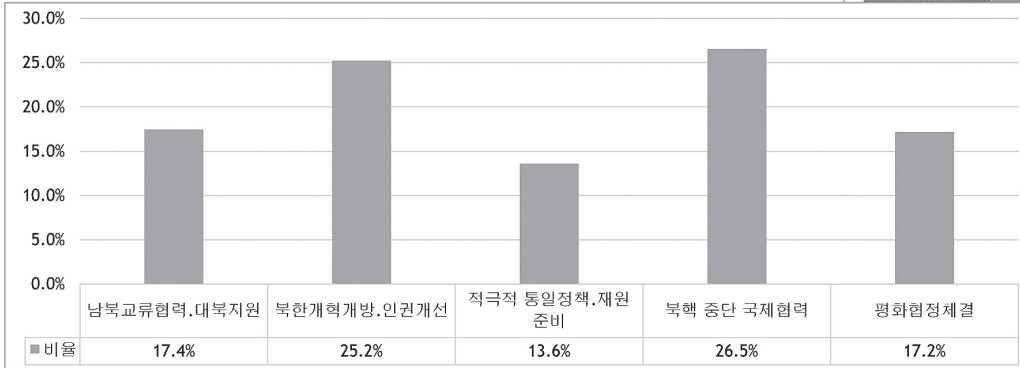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경우 중국>미국>북한>러시아>일본 순으로 위협을 크게 인식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경우 일본>중국>미국>북한>러시아 순으로 위협을 크게 인식

2-5-8.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응답자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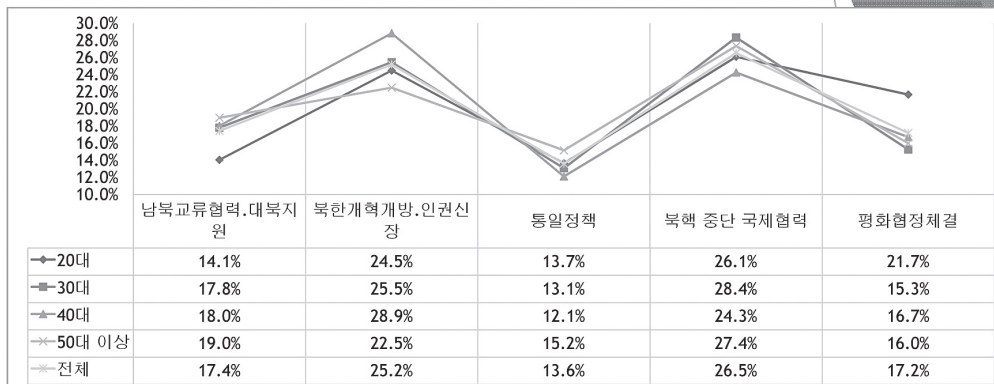
- 미국은 협력, 중국은 경쟁, 일본과 러시아는 경계와 경쟁 대상으로 각각 인식하는 비율 높음

2-6. 최우선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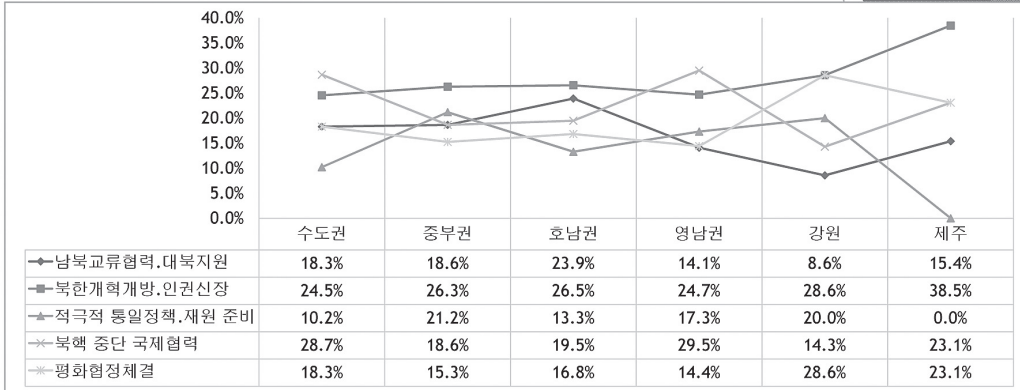
- 북핵 중단 국제협력>북한 개혁개방.인권개선>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평화협정체결 순
- 적극적 통일정책이나 통일재원 준비는 북핵이나 북한변화의 절반 정도에 불과

2-6-1. 최우선 대북정책-세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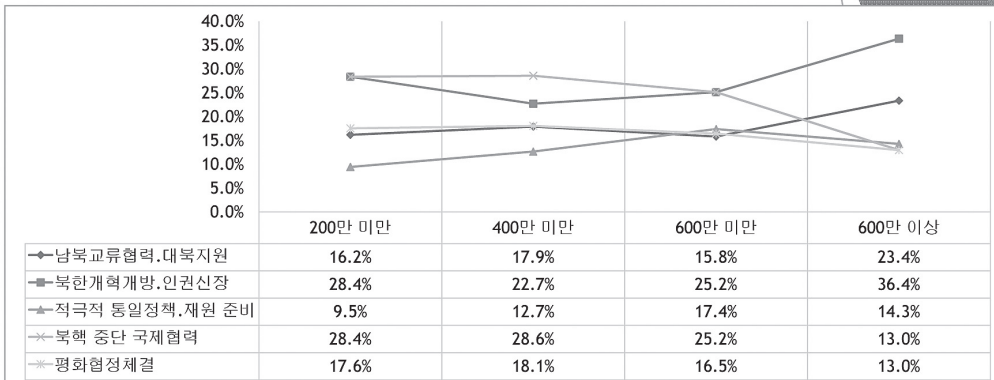
- 세대 간 인식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 20대, 30대, 50대 이상은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을, 40대는 북한 변화를 우선시

2-6-2. 최우선 대북정책-지역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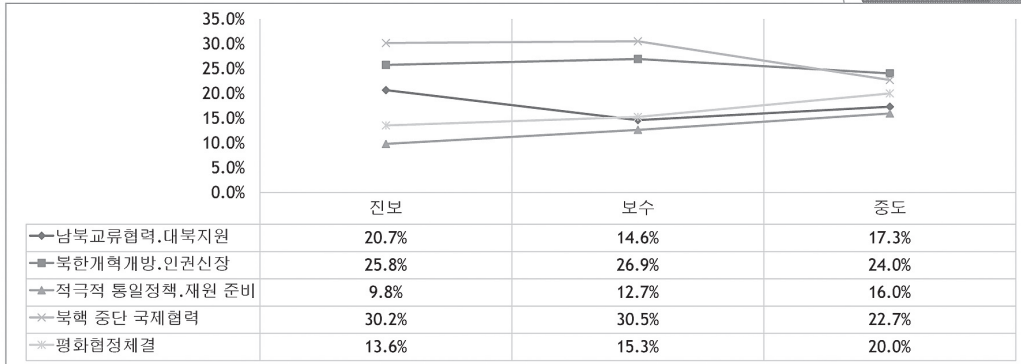
-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중부권과 호남권은 북한 변화를 최우선시
- 강원권은 북한 변화와 평화협정체결, 제주권은 북한 변화를 최우선시

2-6-3. 최우선 대북정책-월 가구소득수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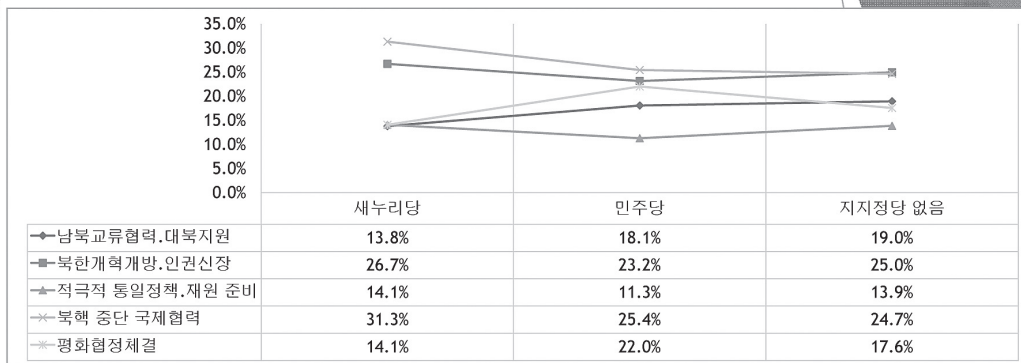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400만원 미만은 북핵 중단 국제협력을, 400만원 이상은 북한 변화를 우선시

2-6-4. 최우선 대북정책-정치성향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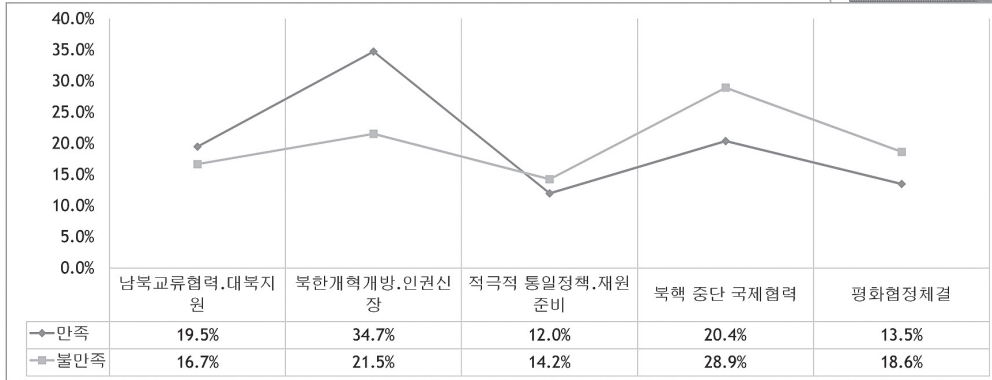
-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이나 북한변화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인식이 비슷함
- 반면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진보층의 우선시 비율이 높음

2-6-5. 최우선 대북정책-지지정당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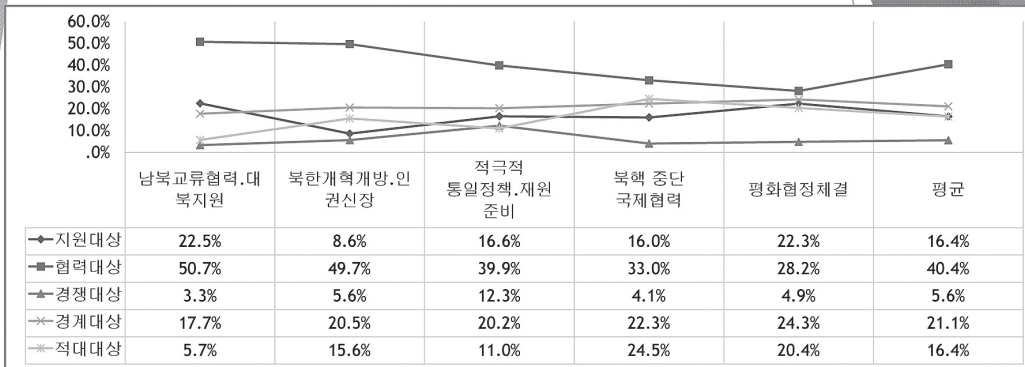
- 새누리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비해 북핵 중단>북한 변화>통일정책을 우선시
- 민주당 지지층은 새누리당에 비해 평화협정체결,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도 조금 더 중시
-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 북한 변화>북핵 중단>교류협력, 지원>평화협정체결>통일정책 순

2-6-6. 최우선 대북정책-한국경제상황 만족도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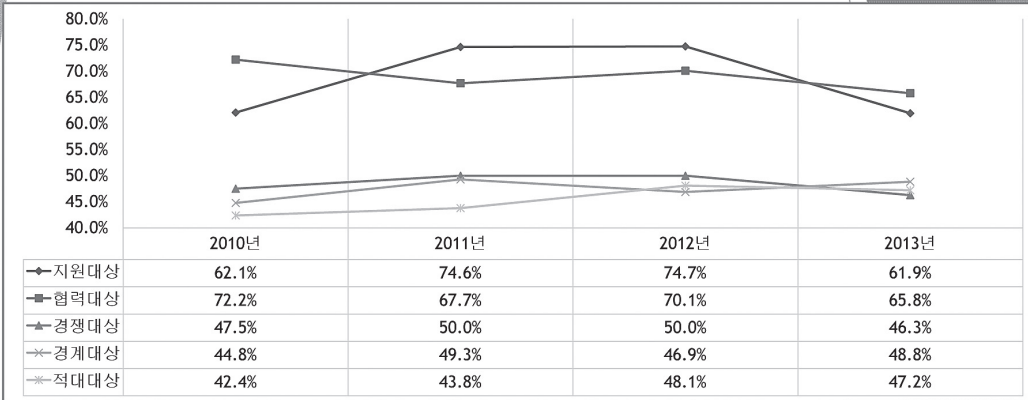
- 만족하는 경우 북한 변화>북핵 중단>교류협력,지원 순으로 우선시
-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북핵 중단>북한 변화>평화협정체결 순으로 우선시

3-1-1.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한 인식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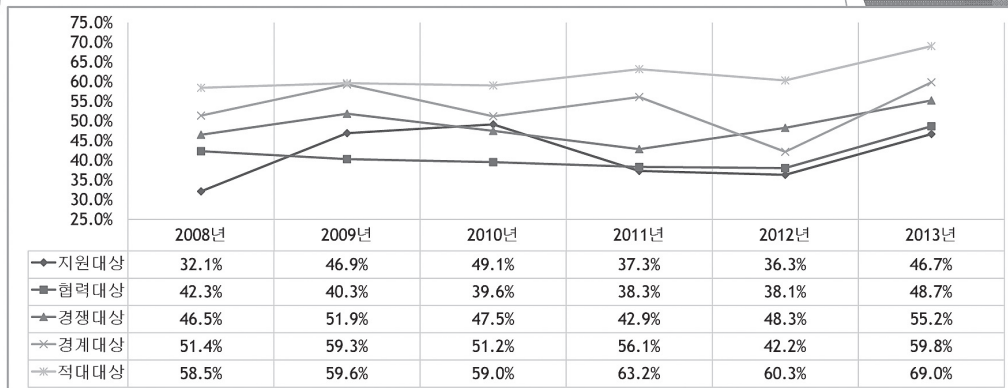
- 최우선 과제와 무관하게 모두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다만 핵문제를 우선시할 경우 적대.경계대상, 교류협력이나 지원을 우선시할 경우 지원대상, 북한 개혁개방이나 인권신장, 통일정책,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시할 경우 경계대상 인식 큼

3-1-2. 북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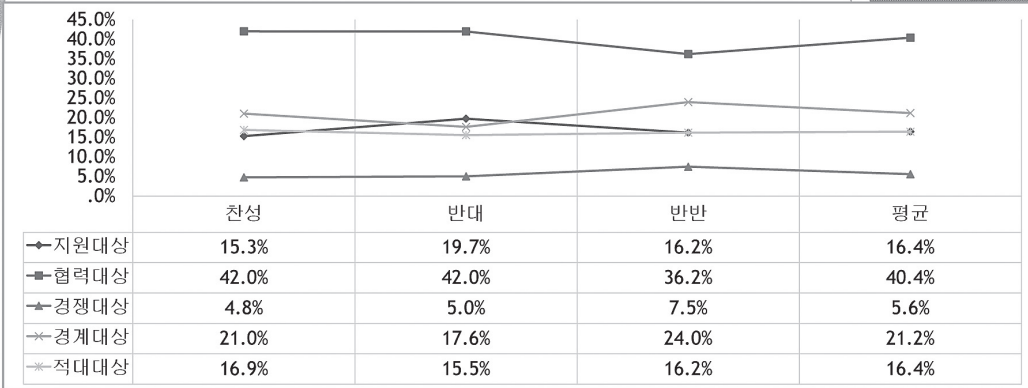
- 경계대상이라는 인식을 제외한 모든 응답에서 찬성 비율이 하락
- 지원과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층과 경쟁·경계·적대대상이라는 인식층간 지속적 차이 존재

3-1-3. 북한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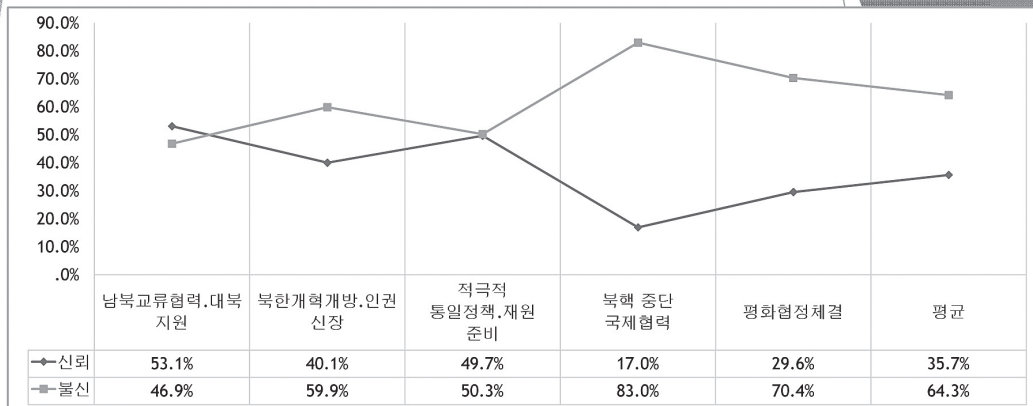
- 2013년의 경우 경계대상 인식층의 급증(17.6%) 포함 전반적으로 증가
-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층이 가장 높고 지원·협력대상 인식층이 가장 낮은 양상 지속

3-1-4.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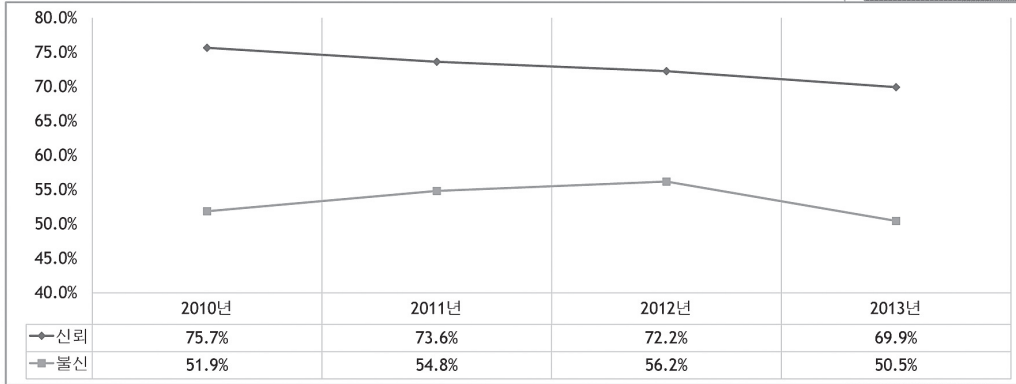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인 비율 가장 높음
- 다만 찬성하는 경우 경계대상, 반대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라는 인식도 큼

3-2-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한에 대한 신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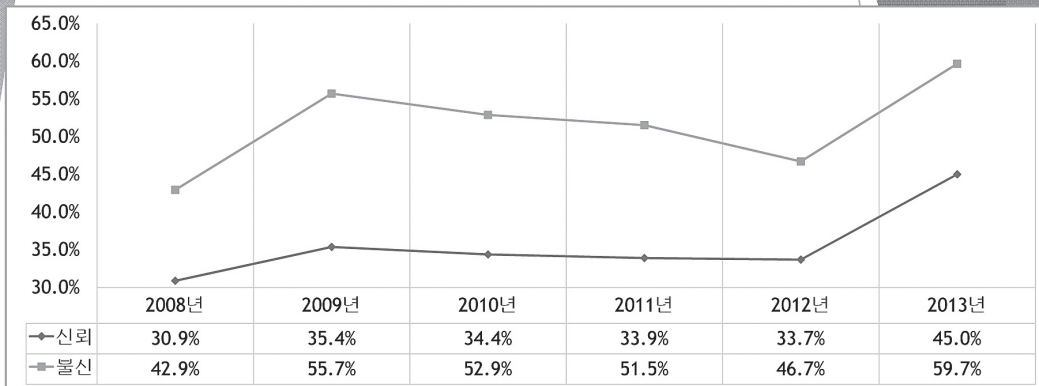
-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의 경우 북한 신뢰 비율이 절반 이상
-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체결, 북한 변화, 통일정책의 경우 불신 비율이 50% 이상

3-2-2. 북한에 대한 신뢰여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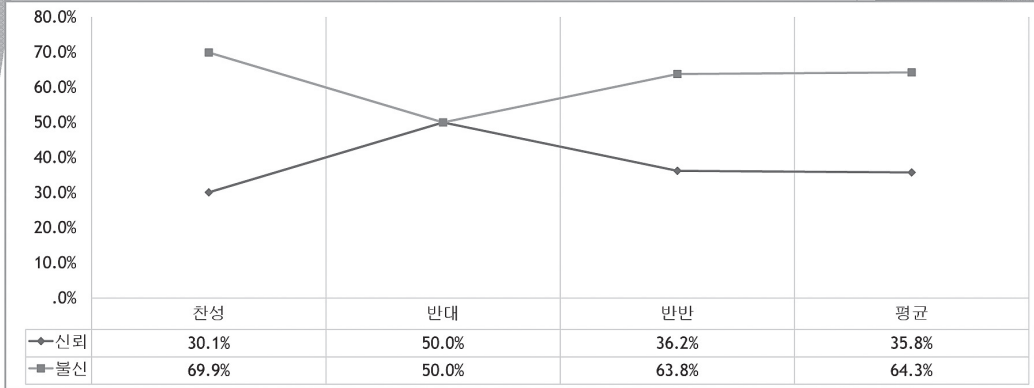
○ 신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찬성 비율이 높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 지속

3-2-3. 북한에 대한 신뢰 여부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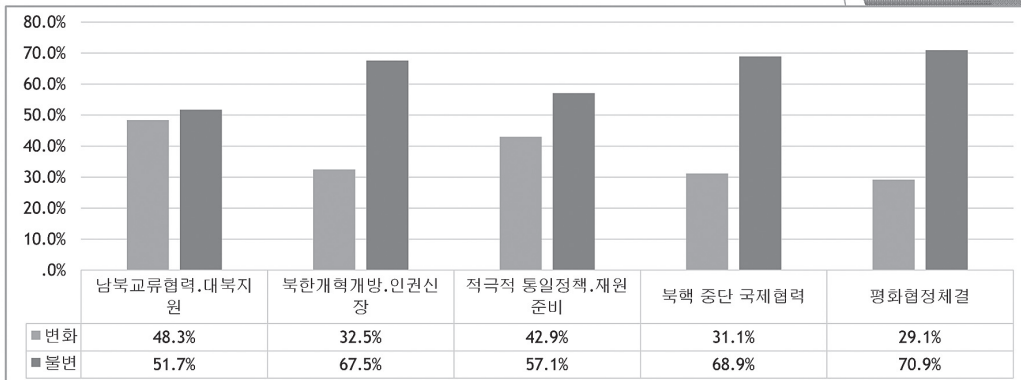
○ 불신하는 경우 찬성비율이 높은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모두 찬성비율 급증

3-2-4. 한국 핵무기 보유여부별 북한에 대한 신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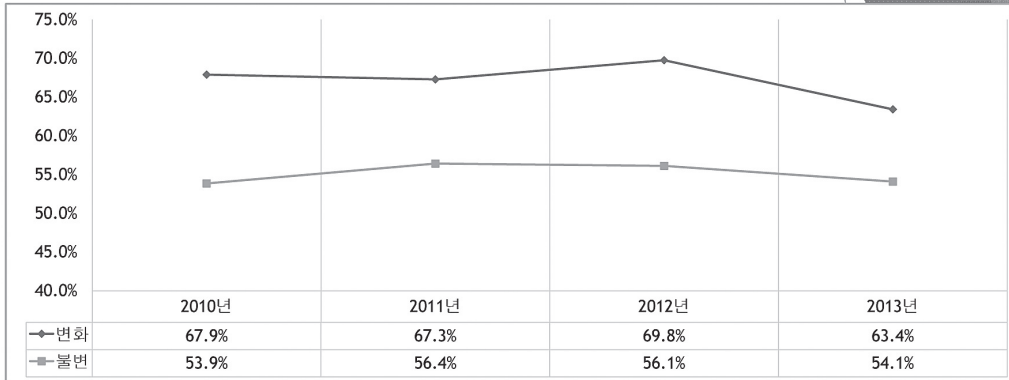
○ 핵무기 보유에 대해 찬성 또는 판단 유보층의 대북 불신감이 반대층에 비해 훨씬 큼

3-3-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한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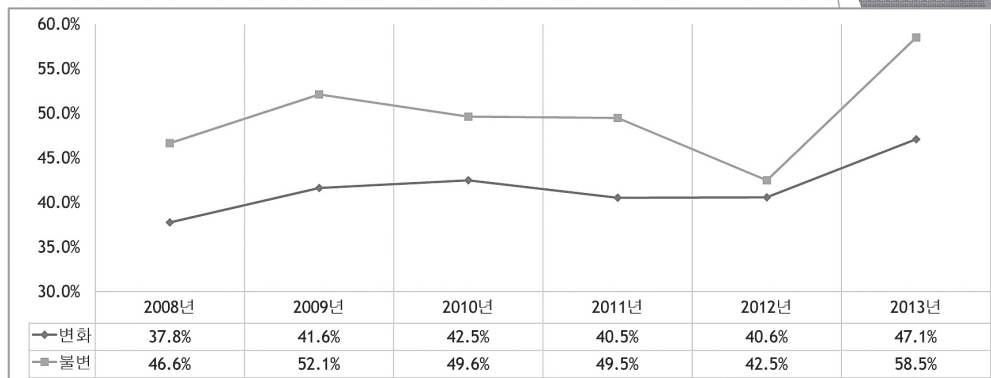
○ 북한 변화 인식은, 50% 미만이지만,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이나 통일정책 응답에서 높음
○ 북한 불변 인식은 평화협정체결, 북핵중단 국제협력, 북한 개혁개방.인권개선 응답에서 높음

3-3-2. 북한 변화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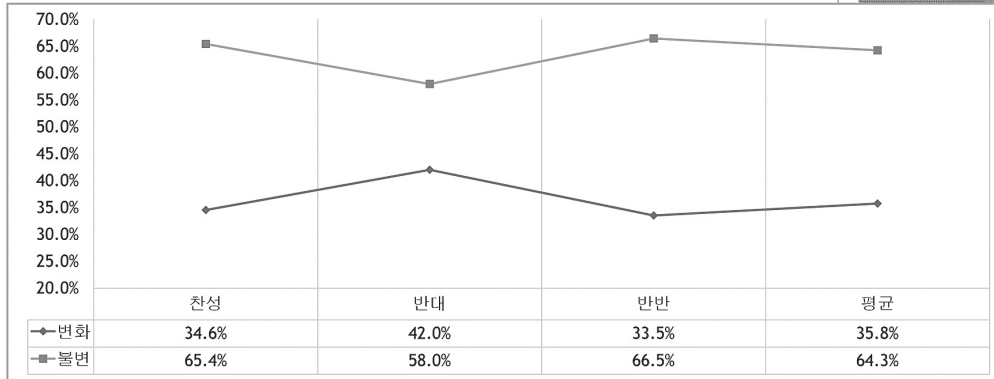
- 북한이 변한다고 인식하는 층의 찬성비율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높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 올해의 경우 찬성비율의 차이가 처음으로 한자리 수(9.3%) 이내로 진입

3-3-3. 북한 변화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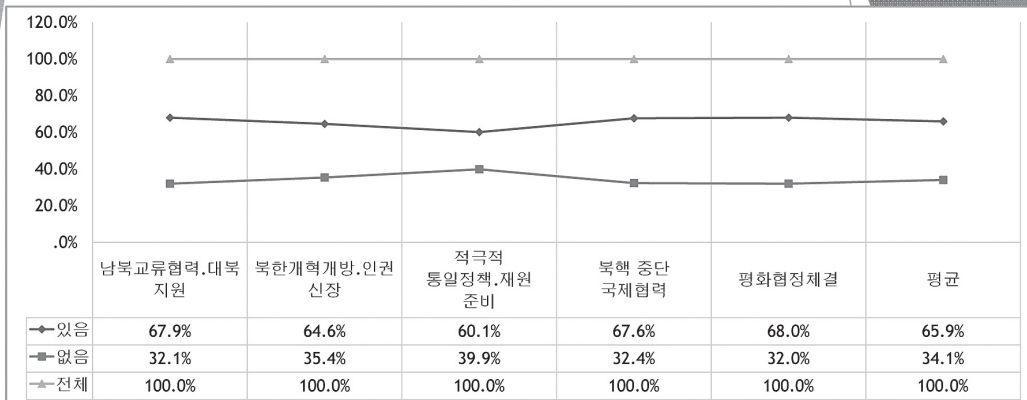
-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층의 찬성 비율이 높은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 특히 올해의 경우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층의 찬성 비율이 급증(16.0%)

3-3-4. 한국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한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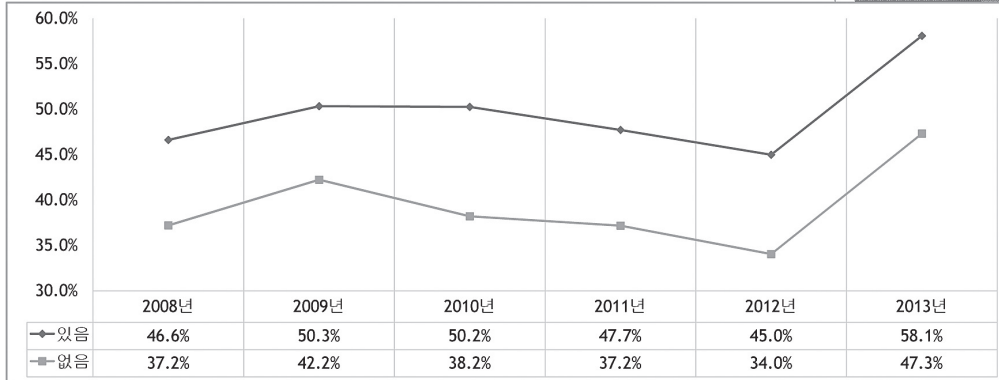
○ 핵무기 보유 찬성이나 판단 유보층의 북한 불변 응답 비율이 반대층보다 8% 전후 높은 양상

3-4-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한무력도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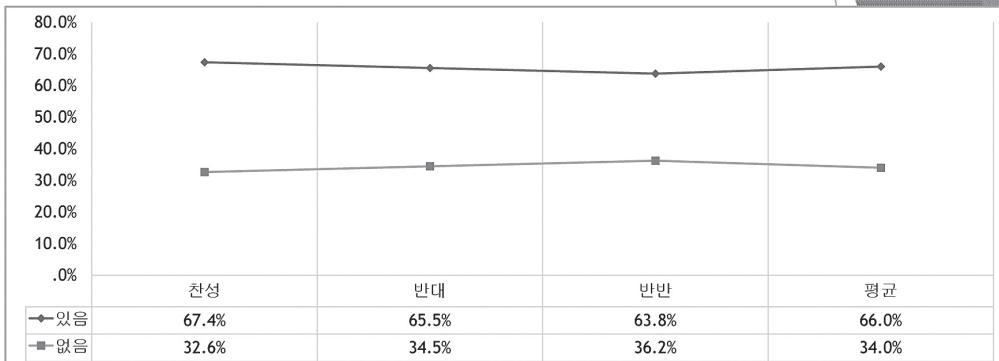
○ 평화협정체결 >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 북핵 중단 국제협력 > 북한개혁개방.인권신장 순으로 높으나 통일정책을 제외하면 최우선과제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3-4-2. 북한 무력도발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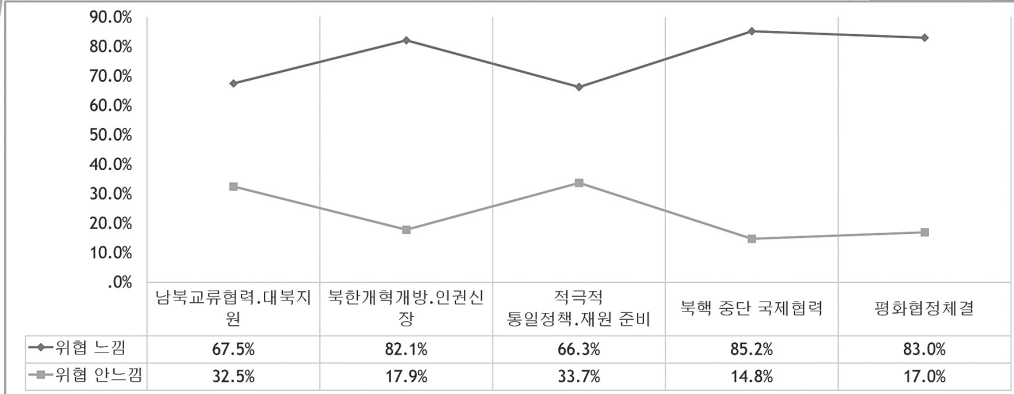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추세가 지속

3-4-3. 한국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한 무력도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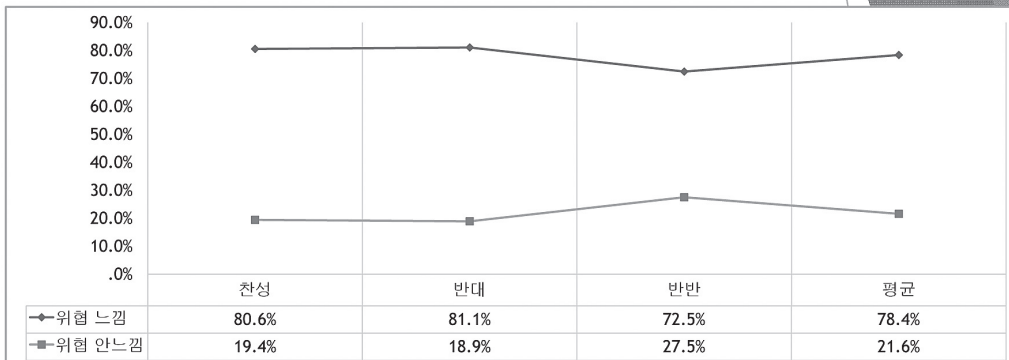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판단과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3-5-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핵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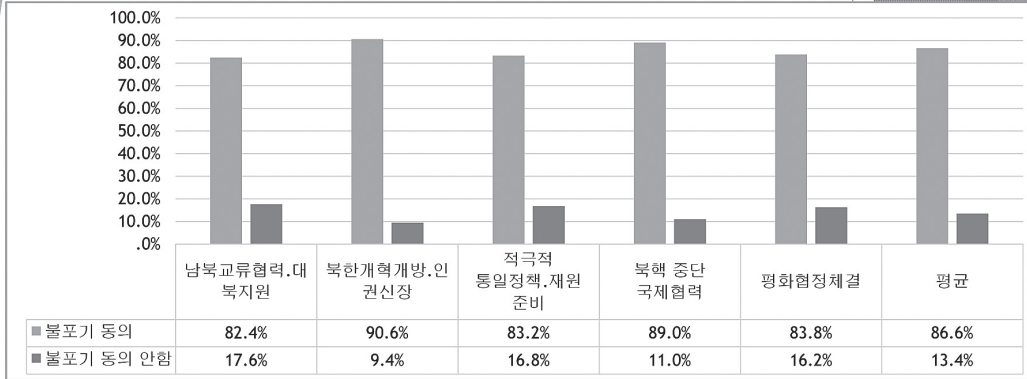
- 북핵 중단 국제협력>평화협정체결>북한개혁개방,인권신장 순 80% 이상이 위협으로 인식
-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통일정책 순 60% 중반 정도가 위협으로 인식

3-5-2. 한국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핵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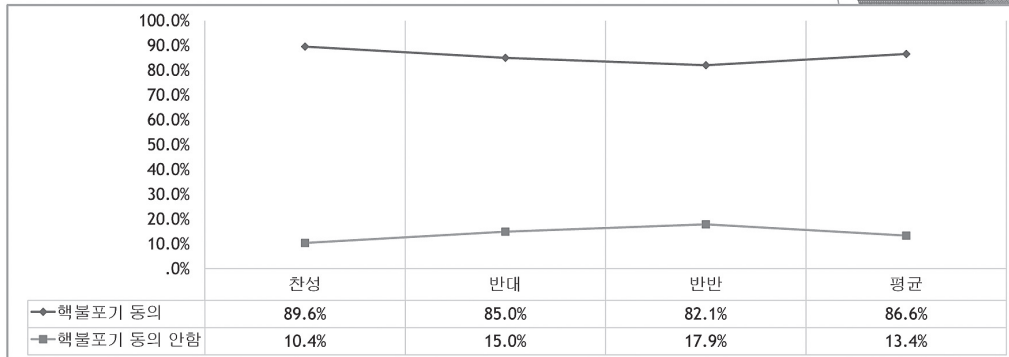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반대와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3-6-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한 핵 불포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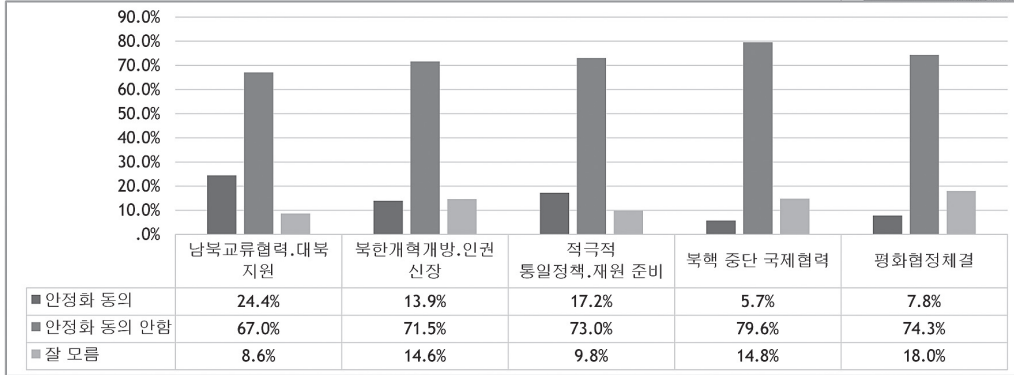
- 북한개혁개방.인권신장>북핵 중단 국제협력 순 90% 전후가 북한 핵 불포기 동의
- 평화협정체결>통일정책>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순 80% 초반 정도가 북한 핵 불포기 동의

3-6-2. 한국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한 핵 불포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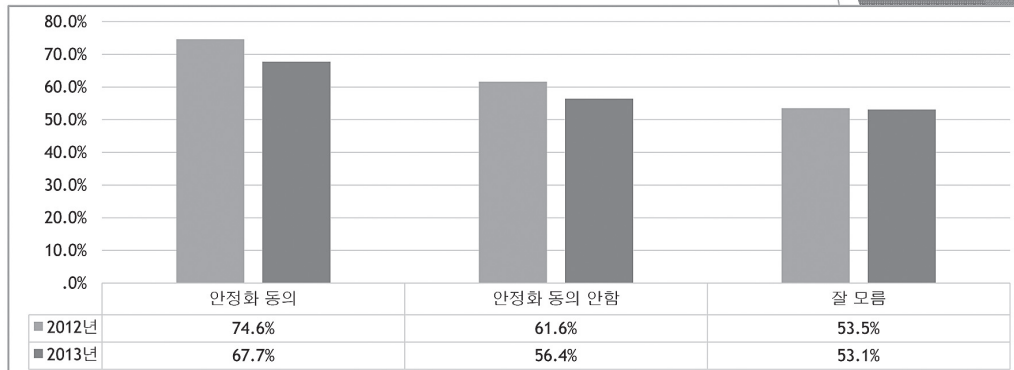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보다 북한 핵불포기 동의율이 4.6% 높음
-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80% 이상이 북한 핵불포기에 동의

3-7-1.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별 북한 정권 안정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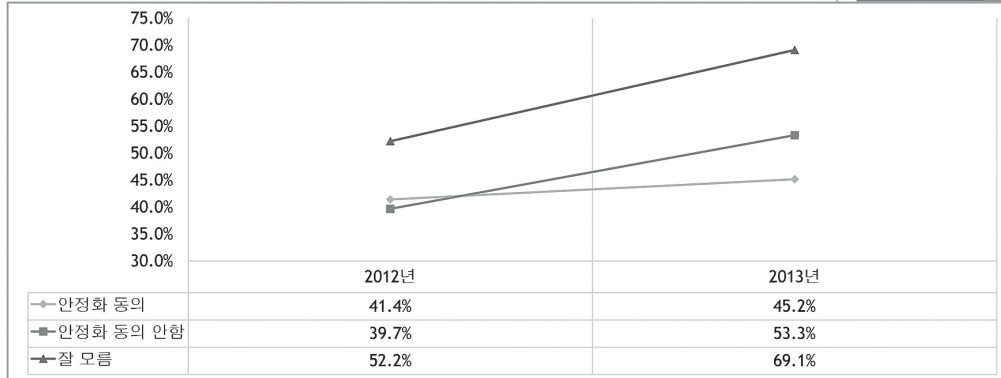
- 북핵 중단 국제협력>평화협정체결>통일정책>북한변화 순 북한 정권 안정화 동의 없음
-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통일정책>북한변화 순 북한 정권 안정화에 동의

3-7-2. 북한 정권 안정화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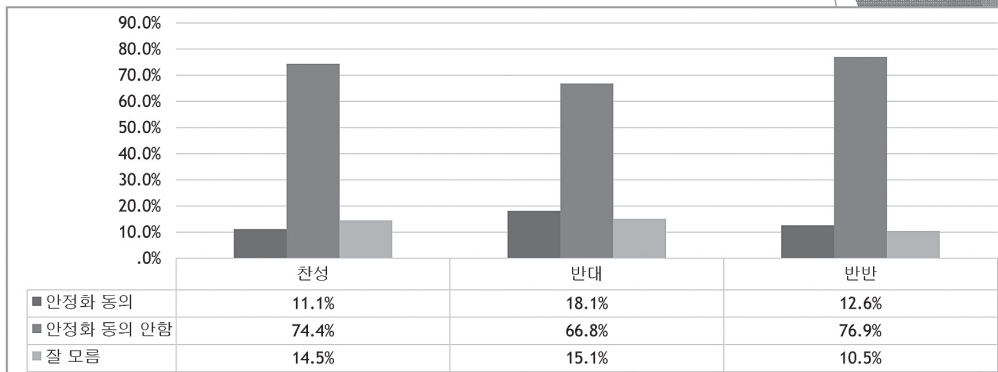
- 안정화에 동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이 10% 이상 높음

3-7-3. 북한 정권 안정화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 안정화에 동의하는 않는 경우(+13.6%)와 잘 모른다는 경우(+16.9%) 찬성 비율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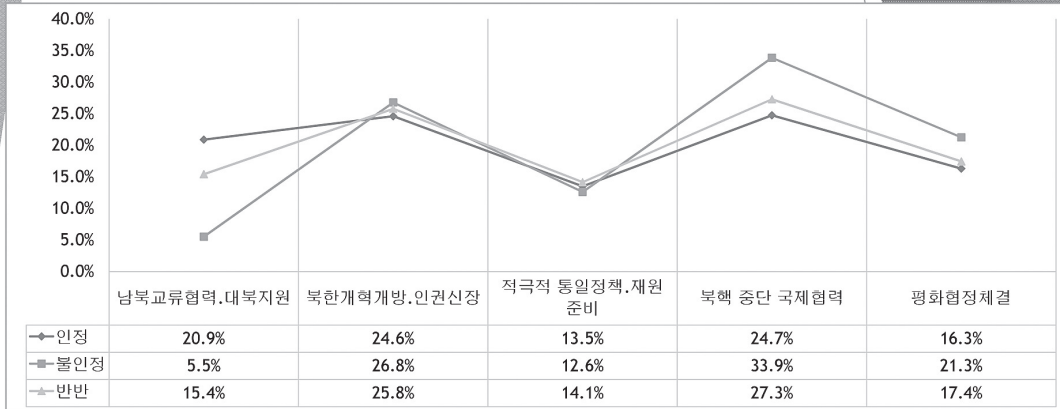
3-7-4. 한국 핵무기 보유 여부별 북한 정권 안정화 인식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경우, 안정화에 대한 동의 비율 높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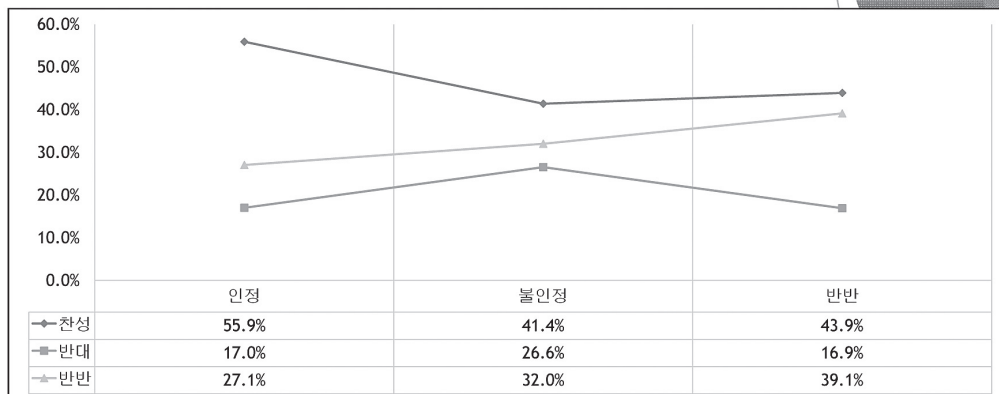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경우, 안정화에 동의 않는 비율이 높음(+7.6%)

3-8-1. 최우선 대북정책-북한 국가인정 여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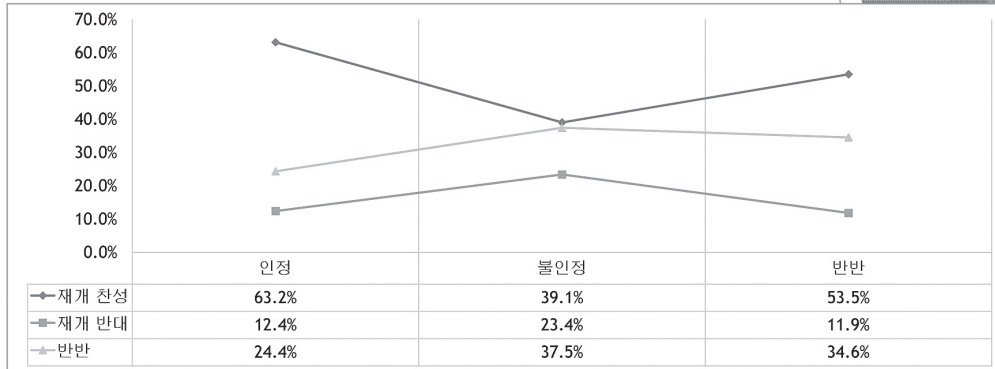
○ 인정하는 경우 북핵 중단(24.7%)>북한 변화>교류협력.대북지원(20.9%) 순으로 우선시
 ○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북핵 중단(33.9%)>북한 변화>평화협정체결(21.3%) 순으로 우선시

3-8-2. 개성공단 유지-북한 국가인정 여부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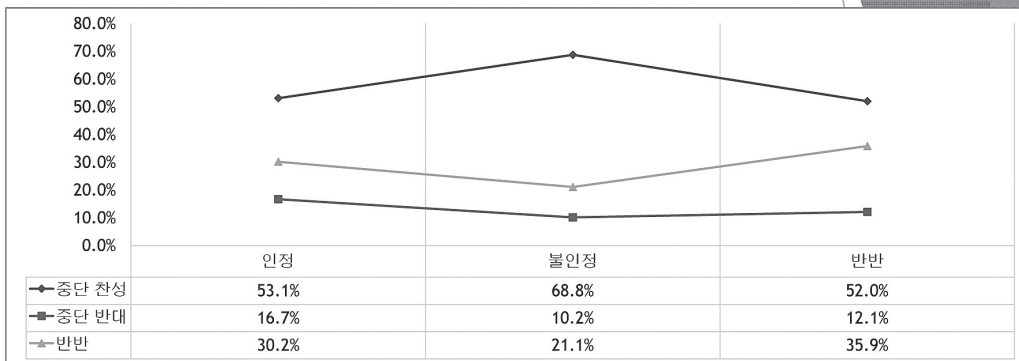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찬성 비율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12% 높음

3-8-3. 금강산관광 재개-북한 국가인정 여부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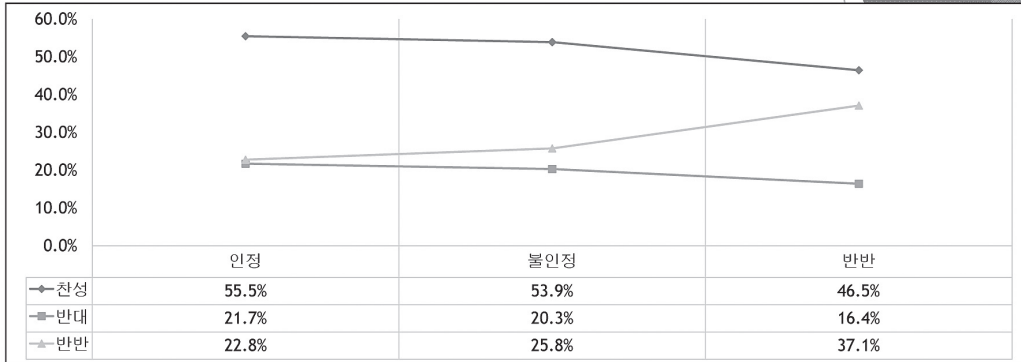
○ 인정하는 경우 불인정보다 찬성 비율이 24.1% 높고 반대 비율은 11% 낮음

3-8-4.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북한 국가인정 여부별 응답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보다 찬성 비율이 16.7% 높음

3-8-5. 한국의 핵무기 보유-북한 국가인정 여부별 응답 비율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찬성 비율이 모두 50% 중반으로 수렴

2013 통일의식 조사결과

• 발표 4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 머리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남북한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정치·경제적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 혹은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와 인식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2010년 천안함사건이후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2009년의 핵실험, 2010년의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느끼는 안보위협이 증대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해왔다. 남북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한중간의 경제교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지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2013년 한반도 정세는 주변국들에서의 정권교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특히 김정일 사후 정권을 승계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권력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어떻게 주변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2013년 새해가 밝기 전부터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안2087호를 1월 23일에 채택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의 성공적 진행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4월 초까지 한반도는 출구전략없는 군사적 갈등의 장인 것마냥 비춰지기도 하였다. 4월 이후 남북관계는 군사적 갈등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전면적 남북교류의 단절이라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5월 하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후 진행되었던 6월 12일의 남북당국간회담이 무산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7월 초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희망을 이어갔다.¹⁾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위기와의이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한국인들의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5월 초와 6월말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방중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언론의 보도 행태 등도 한국인들의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장은 한국인들의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를 지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의 종합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까운 주변국

주변국가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의식조사는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설문문항은 주변 4강 국가에 대한 친밀도와 북한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자신이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한 나라를 골라 답한다. 따라서 설문의 구조 상 한 나라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다른 국가의 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과 북한처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개연성이 큼을 시사한다. 2007년 이후 이 설문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1) 개성공단이 9월 11일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9월 16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재가동이 이어졌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며, 9월 21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 행사 연기를 발표 등과 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돌발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2013년 통일의식조사 시점인 7월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로 2013 통일의식조사의 주변국 관계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아니다.

〈표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66.3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8.6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17.5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6.7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0.9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N=8,378 (무응답 제외), 카이제곱=225.69, p < .001

친밀도에 따른 주변국의 선호 순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평균 값으로 알 수 있듯이 늘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3위와 4위자리를 바꾸었다.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상호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의 증가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북한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2013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증가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약 7.5%씩 증가한 대미친밀도는 2010년 70.7%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두 해 연속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 65.9%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8년의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며,²⁾ 2009년의 증가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한미관계 개선의 노력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³⁾ 2013년에는 다시 전년도에 비하여 10.3%나 증가하여 통일외교연구소가 실시된 이후 최고인 76.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철회하면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

2) 박명규 외, 2009 통일외교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 124.

3) 박명규 외, 2011 통일외교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p. 116.

4) 아산정책연구원이 2012년부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표집을 통한 면접원 전화인터뷰 결과 미국의 국가호감도는 2012년 8월 1.55, 2013년 1월 5.70, 3월 5.81, 5월 5.74, 7월 5.61을 기록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한중정상 회담/각국 정상 호감도/ 최저임금평가," 2013년 7월). 아산데일리폴은 개별국가에 대한 국가의 호감도를 "전혀 호감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호감이 있다"를 10으로 했을 때 응답자들의 호감도를 평균을 내어 측정하고 있어 통일외교연구소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해석을 하는데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약 15-16% 정도로 유지되었다는 점이었다.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 없었던 2012년에는 다시 20%대로 회복되는 등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미국에 대한 친밀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3년에 대북친밀도는 2012년말 부터 계속된 한반도의 위기고조로 인하여 9.6%나 감소한 11.0%로 통일의식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⁵⁾ 장거리 미사일발사, 제3차 핵실험 성공발표, 유엔제재를 둘러싼 갈등, 미사일 추진체 발사 및 개성공단 폐쇄 등의 군사적 도발이 대북친밀도의 감소로 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와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관계의 특징은 서로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나라에 대한 친밀도가 최소 77.5%에서 최고 8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친밀도는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대미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북친밀도는 감소하였으며, 대미친밀도가 큰 변화없었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대북친밀도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2012년의 대미친밀도의 소폭 하락은 대북친밀도의 소폭 상승으로, 2013년 대미친밀도의 상승은 대북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가 10%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 민족적 동질감 등에 따른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설문문항의 구조상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는 클 수 없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지난 7년간 중국에 대한 친밀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0.2%였던 대중친밀도는 2010년 4.2%로 떨어졌었다. 변화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이와 같은 대중친밀도의 감소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투영으로 받아들여졌다. 서해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천안함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망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013년의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2010년과 비교하여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5.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⁶⁾ 중국의 대북제재 유엔결의안에 동참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 했던 점 등이 한국인들의 대중친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아산데일리포, 2013년 7월)에서도 북한의 호감도는 2012년 8월 3.19, 2013년 1월 2.99, 3월 2.03, 5월 2.07, 7월 2.27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에 의한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가 대북친밀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 아산데일리포, 2013년 7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도는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일친밀도의 감소는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일친밀도는 2012년과 2013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과 비교하면 2013년에는 4%가 감소한 5.1%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3년의 대일친밀도는 처음으로 대중친밀도보다 낮았으며, 이를 단순히 대미친밀도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2012년 여름을 거치며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악화, 그리고 2013년 보수정권에 의한 일본의 우경화 현상 등은 한국인들에게 우려로 다가왔을 것이다. 일본 내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일관계의 변화는 한국인들의 대일친밀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른 여론조사를 고려할 때⁷⁾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계속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는 7년 간의 조사를 통틀어 평균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한반도의 역사에 미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최근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 한-북-러 가스관 설치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어도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와 더불어 주변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통일외식조사는 지속적으로 측정해왔다. 주변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 답하였다. 설문문항 구조상 친밀도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 대한 위협도의 증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도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2007년 이후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3년 조사에서 드러난 주변국의 위협도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친밀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에 미국이 위협적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2009년 이후 10%

7)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데일리포: 한일관계 평가/세계 개편안 평가.” 2013년 8월 1차. 이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월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31이었으나 8월 조사에서는 2.64를 기록하여 북한에 대한 호감도 2.38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만으로 하락하고 2013년에는 4.4%로 거의 미미하다고 하겠다. 북한에 대한 위협도는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9.6%와 8.3%가 감소하였었는데, 2013년에 다시 9.6%가 증가하여 56.9%를 기록하였다. 중국에 대한 위협도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기 8.7%와 9.0% 증가하였는데, 2012년과 2013년에 2년 연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12.3% 감소한 21.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도는 2010년 최저치인 10.4%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소폭 증가를 하였으나, 2013년에 전년대비 3.7%,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표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11.5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18.3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6.9
중국	15.6	14.6	15.9	24.6	33.6	30.5	21.3	22.3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1.0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N=8,378 (무응답 제외), 카이제곱=832.42, $p < 0.001$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의 갈등의 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인들이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2009년까지는 일본이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2010년 이후는 중국에 대한 위협도가 일본에 대한 위협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일위협도와 대미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2013년 위협도 조사에서는 다시 중국의 위협도가 감소하고 일본의 위협도가 증가하였다. 2008년 독도문제로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심해졌을 때 북한에 대한 위협도보다 일본에 대한 위협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작년부터 심해진 일본정치의 우경화 현상이 대일위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5월 18일에서 20일까지 북한이 총 6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한 사건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39.7%라고 보고하였다.⁸⁾ 이는 한반도의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3~4월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64.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4월 3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금지조치 이후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73.5%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다. 5월말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50% 초반으로 하락하여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난다.⁹⁾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는 가장 높게 인식하는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에 대한 그 동안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위협도의 감소에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단기적 이슈의 영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2012년 이후 대중위협도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인들은 북핵해결(37.2%)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력(20.6%) 및 경제협력(20.1%)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북한문제 처리에 있어서 한중간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56.6%와 53.5%가 한미, 한중관계는 좋아졌으나 열 명 중 여덟 명은 한일관계와 남북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고조된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유례없는 공조를 보인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의 책임정도

남북관계의 악화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통일의식조사의 매우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통일의식조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개별 국가별로 하였다. 일본의 책임소재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표 3>은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 대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의 책임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8)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데일리풀: 한미동맹/미사일방어체제(MD)/중산층인식,” 2013년 5월 2회차.

9) 아산데일리풀, 2013년 5월 2회차.

10) 아산데일리풀, 2013년 7월.

11)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데일리풀: 국가안보/주변국 관계 평가/남북당국회담 무산책임,” 2013년 6월.

〈표 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의 책임정도 (%)

국가	연도	아주크다	조금크다	‘크다’	중간	별로크지않다	거의없다	‘없다’	카이제곱
북한	2009	57.9	30.3	88.1	10.1	1.4	0.3	1.7	39.70 p=0.001
	2010	62.6	27.0	89.6	9.0	1.1	0.3	1.4	
	2011	63.2	25.8	88.9	10.3	0.6	0.2	0.8	
	2012	56.0	31.3	87.3	10.5	1.5	0.7	2.2	
	2013	63.5	25.3	88.8	9.7	1.5	0.0	1.5	
한국	2009	13.9	39.5	53.4	30.7	13.7	2.2	16.0	82.70 p=0.000
	2010	14.3	39.8	54.2	32.5	10.0	3.3	13.3	
	2011	10.4	37.3	47.7	34.7	13.7	3.9	17.6	
	2012	13.2	36.6	49.8	34.8	12.8	2.7	15.4	
	2013	7.3	34.8	42.0	36.8	16.4	4.8	21.2	
미국	2009	18.4	43.0	61.4	28.8	7.8	2.0	9.8	101.07 p=0.000
	2010	15.8	40.7	56.5	34.4	7.8	1.3	9.1	
	2011	13.9	35.7	49.6	36.7	11.0	2.7	13.7	
	2012	16.2	34.8	50.9	35.3	12.2	1.7	13.8	
	2013	11.8	32.6	44.3	41.7	11.7	2.3	14.0	
중국	2009	13.1	34.3	47.4	40.7	10.1	1.8	12.0	122.14 p=0.000
	2010	20.8	38.6	59.4	32.4	6.7	1.5	8.2	
	2011	26.5	39.1	65.5	27.5	6.1	0.9	7.0	
	2012	22.6	38.0	60.6	32.8	5.4	1.3	6.7	
	2013	19.2	39.2	58.3	32.5	7.4	1.8	9.2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크다는 반응은 지난 7년간 88%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주 크다’는 응답이 ‘조금 크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군사적 도발에 의해 대북친밀도가 감소하고 대북위협도가 증가하였던 2010년, 2011년, 2013년에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간’이라고 응답한 유보층과 ‘별로 크지 않다’와 ‘거의 없다’라는 응답자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도 결코 적지 않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의 증감이 있었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비중이 7.8% 감소하였으나 유보층의 비율이 2% 증가하고 책임이 없다는 비중은 5.8%만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 6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477명(전체 응답자수: 1,000명) 중 42.3%가 국가안보 불안에 있어 한국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33.8%만이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¹²⁾ 이러한 조사의 결과들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압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보다 융통성 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미국이 책임있다는 반응은 한국이 책임이 있다는 반응보다 아주 조금 씩이나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한국의 책임의 정도보다 미국의 책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 그리고 정전협정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남북당사자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문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조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84.6%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이 남한만을 겨냥하기 보다는 북미협상을 위한 협상의 자렛대로서 때로는 체제안정을 위한 대내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정도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2012년과 2013년까지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중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2) 아산데일리포, 2013년 6월.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주변국의 행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대한 인식으로 나뉘서 살펴볼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국민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어떤 국가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의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응용 및 발전시킨 개념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미지는 개인들이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를 통하여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주변국의 국가이미지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등 네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측정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여기에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고 제한적인 비교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와 더불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주변국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의식도 구조화된 인지적 집합적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분석에서 동시에 다루지고 있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는 <표 4>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70.2%로 증가한 이후 2013년에는 79.9%까지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전환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찾기 힘들다. 엄청난 규모의 촛불시위를 경험했던 2008년의 상황을 상기할 때, 미국의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70%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은 스키마로서의 국가이미지가 형성된다면 그 이미지가 쉽게 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4〉 미국의 국가이미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협력대상	53.2	70.2	73.7	76.4	75.0	77.3	79.9	72.3
경쟁대상	22.0	13.0	13.7	14.6	14.2	11.0	11.8	14.3
경계대상	22.0	14.8	11.7	8.2	9.7	10.9	7.8	12.1
적대대상	2.9	2.0	0.9	0.8	1.1	0.8	0.6	1.3
합계(N)	1,198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N=8,415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328.79, p < 0.001

경쟁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2008년 이후 1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경계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2010년, 2011년, 2013년 조사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 미국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약 92.0%는 향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통일이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71.2%로 나타난 점들을 고려할 때,¹³⁾ 미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변국의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설문문항이 통일의식조사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일반적인 국가이미지가 정치·군사 안보의 위협과 경제안보의 위협을 구분하지 않은 이미지라면, 이 설문문항은 군사안보와 그에 따른 주변국의 태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치·군사 안보에 기초한 국가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의 보기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로 제시되었다.

13) 아산데일리포, 2013년 5월 2차.

〈표 5〉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50.6	1.3	45.5	2.6	1,200
2008	57.4	1.4	37.4	3.8	1,213
2009	65.1	0.7	32.3	2.0	1,203
2010	74.7	0.7	23.0	1.7	1,200
2011	72.4	1.6	24.1	1.9	1,201
2012	72.8	1.8	23.8	1.6	1,200
2013	75.2	1.6	20.9	2.3	1,200
평균	66.9	1.3	29.6	2.3	

N=8,417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335.03, p<0.001

〈표 5〉에 나타나듯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예측할 수 있듯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0년 조사 이후 70% 이상의 국민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20% 이상의 국민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시 미국은 한국을 돕거나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대상이라는 관계인식이 증가하는 현상과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예측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중국의 국가이미지

미국의 국가이미지 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지표가 중국의 국가이미지이다. 2008년 이후 매우 안정적인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와는 달리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지 않고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중국 자체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촉발되는 위기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대중친밀감의 감소, 대중위협도의 증가,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 책임정도의 증가 등에 나타나듯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해에는 협력대상 혹은 경쟁대상으로서의 중국의 국가이미지보다 경제대상 혹은 적대대상 등의 국가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 중국의 국가이미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협력대상	19.3	23.7	21.1	19.7	20.5	16.9	28.5	21.4
경쟁대상	46.5	38.2	42.0	45.1	40.2	35.3	43.9	41.6
경계대상	31.0	32.9	33.3	31.8	34.9	35.8	24.5	32.0
적대대상	3.3	5.1	3.6	3.4	4.4	5.4	3.1	5.0
합계(N)	1,197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N=8,410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100.40, p < 0.001

그런데 〈표 6〉의 결과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반드시 중국의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협력대상으로서의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큰 변화의 폭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2013년에는 11.6%나 증가하였다. 2013년의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새로운 변곡점이 될런지는 앞으로 더 관찰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쟁대상 이미지는 최고 46.5%에서 최저35.3%, 경계대상 이미지는 최고 35.8%에서 최소 31.0%, 적대대상 이미지는 최고 5.4%에서 최저 3.3% 사이에서 유지되었다. 2013년에는 경쟁대상 이미지도 8.6%가 증가한 반면, 경계대상 이미지는 조사 이후 최저치인 24.5%를 기록하였으며 적대이미지도 2.3%가 감소하는 등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7〉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5.3	26.8	56.4	11.4	1,200
2008	4.5	30.4	52.2	13.0	1,212
2009	3.1	38.5	50.8	7.7	1,200
2010	3.3	55.5	37.4	3.8	1,200
2011	2.4	62.8	31.0	3.8	1,201
2012	1.3	58.3	37.5	2.8	1,199
2013	3.3	49.7	41.4	5.6	1,200
평균	3.3	46.0	43.8	6.9	

N=8,412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662.69, p < 0.001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50%가 넘고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었다. 이와는 달리 2010년과 2011년 사이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55%를 넘고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 2013년에는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9.7% 정도에 머무르고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1.4%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태도 예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예상보다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

3) 일본의 국가이미지

〈표 8〉은 일본의 국가이미지 변화를 보여준다. 협력대상으로서의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2011년까지는 15%를 전후로 하여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2년에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22.4%를 기록하였고 2013년 조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10.6% 감소한 11.8%를 보이는 등 최근 2년간 변화의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한일관계를 경쟁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응답자의 비율도 꾸준히 평균 약 43%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을 경계의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과 2010년에는 30% 미만이었으나 2012년 이후 3년 동안은 약 3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적대대상 이미지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최근에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일본의 국가이미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협력대상	14.6	16.7	19.5	14.3	13.8	22.4	11.8	15.4
경쟁대상	46.6	35.6	49.4	50.9	40.8	36.9	41.4	42.9
경계대상	30.3	31.1	26.2	28.0	34.6	35.3	35.3	31.6
적대대상	8.5	16.7	4.9	6.8	10.7	12.0	11.4	10.2
합계(N)	1,196	1,211	1,203	1,200	1,201	1,200	1,200	

N=8,411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234.96, p < 0.001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예상의 결과는 <표 9>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핵심함이 있었던 2009년을 기준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11% 정도로 나타난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과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기 평균 3.5%와 8.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이 한반도의 전쟁을 통하여 자국이 이익을 확보하려할 것이라는 의견에 국민들의 10명중 7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가이미지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일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보다는 경쟁 혹은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

	한국을 도울것이다	북한을 도울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16.2	3.3	72.7	7.9	1,200
2008	14.7	4.3	69.5	11.6	1,211
2009	24.6	3.8	66.0	5.7	1,201
2010	17.1	2.3	71.6	9.1	1,200
2011	15.3	3.3	74.3	7.2	1,201
2012	11.6	5.0	75.4	8.0	1,199
2013	11.3	2.9	75.1	10.7	1,200
평균	15.8	3.5	72.1	8.6	

N=8,412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152.49, p < 0.001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표 10>에 나타난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도 큰 변화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력대상 이미지는 평균 24.7%(최소 21.7%, 최대 28.8%), 경쟁대상 이미지는 평균 38.1%(최소 32.9%, 최대 40.3%), 경계대상 이미지는 평균 33.3%(최소 29.8%, 최대 38.1%), 적대대상 이미지는 평균 3.9%(최소 2.3%, 최대 3.9%)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최근 두드러지지 않았던 점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0〉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협력대상	22.9	28.8	28.1	21.7	24.7	24.0	22.8	24.7
경쟁대상	40.3	35.2	39.8	40.6	39.3	32.9	38.5	38.1
경계대상	32.1	31.9	29.8	33.5	33.1	38.1	34.8	33.3
적대대상	4.7	4.1	2.3	4.3	2.8	5.0	4.0	3.9
합계(N)	1,195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N=8,408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7028, p < 0.00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11〉에 나타나듯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과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4%를 기록한 반면,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7.4%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는 국민들의 태도가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표 11〉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3.7	19.0	59.1	18.2	1,199
2008	6.0	20.9	54.7	18.4	1,211
2009	4.3	22.5	57.7	15.5	1,200
2010	5.8	19.2	59.5	15.6	1,200
2011	4.2	15.4	61.7	18.8	1,200
2012	3.7	11.8	68.1	16.4	1,199
2013	3.8	12.4	67.4	16.4	1,200
평균	4.5	17.3	61.2	17.0	

N=8,409 (모름/무응답 제외), 카이제곱=12529, p < 0.001

4. 남북, 한미, 북미,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의식조사는 주변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안정과 변화 등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훨씬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7년 81.0%에서 2013년 56.7%로 약 24.3% 감소를 하고, 같은 기간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9.4%, ‘양 팀 모두를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5.1%,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0.2% 증가하였다. 가상의 스포츠 경기를 상정한 것이지만 천안한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10명 중 8명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팀을 응원하겠다고 하였고, 2013년에 북한의 도발을 경험하면서도 10명 중 약 7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평화적 남북관계에 스포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일 수 있다.

<표 12> 북한과 미국의 가상 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북한	81.0	76.6	68.0	70.4	61.7	66.2	56.7
미국	4.0	7.0	8.4	8.6	12.9	11.3	13.4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6.1	6.4	9.9	10.0	10.9	9.8	11.2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8.9	10.0	13.6	11.0	14.3	12.8	18.7
합계(N)	1,197	1,212	1,198	1,196	1,201	1,200	1,200

N=8,404 (무응답 제외), 카이제곱=259.8, p < 0.001

한국이 7회 연속, 북한이 44년만에 월드컵 본선무대를 밟았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 브라질의 외신기자가 북한의 안영학 선수에게 던졌던 “북한이 브라질을 이기는 것과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는 것 중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¹⁴⁾ 라는 질문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남북관계를 시선이 잘 담겨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북한팀의 포르투갈팀과의 마지막 경기를 공개적으로 응원하기 위하여 600여명의 시민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서울의 강남 봉은사에 모이기도

14) 연합뉴스, 2010.6.11.

하였다.¹⁵⁾ 월드컵 이후 브라질과의 첫 경기에서 눈물을 보였던 정대세 선수는 ‘인민루니라는 애칭을 얻고 현재 K-리그 수원팀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북한이 나갈 수 없어 월드컵을 통한 남북한의 스포츠교류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스포츠교류에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북관계	38.3	29.8	39.1	38.1	39.2	35.9	33.8
한미공조	17.6	20.2	19.0	19.2	20.8	19.4	20.2
똑같이중요하다	44.1	50.0	41.9	42.8	40.0	44.7	46.0
합계(N)	1,196	1,206	1,200	1,195	1,200	1,200	1,200

N=8,397 (무응답 제외), 카이제곱=44.79, p < 0.001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혹은 ‘한미공조’를 중시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둘 다 모두 중요한 의제이지만 소위 남남갈등의 한 양상으로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다. 그런데 〈표 13〉에 나타난 조사의 결과는 정권의 변화가 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17~20%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34~49%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 44%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긴장상태에 놓일 전망이 앞으로도 크다.

한편, 지난 정부 시기 동안 남북간의 교류단절은 북한정권이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성의 심화에 대한 우려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시아 최대 노천철광인 북한의 무산철광 인근까지 통하는 철도건설을 완료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자원유출이 혈값에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국내외 언론을 통하여

15) 한겨레, “‘오~피스 코리아’ 남북 경계 녹인 응원열기,” 2010.6.22.

지속적으로 이뤄졌다.¹⁶⁾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 확대와 자원의 헐값 유출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제기되었다.

〈표 14〉 북중협력강화에대한인식 (%)

	2011	2012	2013
매우우려스럽다	29.4	24.6	17.4
우려스러운편이다	46.7	47.9	42.8
별로상관없다	20.3	23.1	31.0
바람직한편이다	3.3	3.8	8.3
매우바람직하다	0.3	0.6	0.5
1,200	1,201	1,200	1,200

N=3,601, 카이제곱=107.63, p < 0.001

〈표 14〉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응답의 비중이 76.1%와 72.5%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남북관계의 단절과 북한과 중국의 긴밀해지는 협력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조사의 결과도 60.2%로 우려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년도 대비 12.3%가 감소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중 협력 강화가 ‘별로 상관없다’거나 바람직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각기 7.9%와 4.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북한 협상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16) KBS, “중, 북 광산에 철도 건설: 자원 대량 유출 우려,” 2013. 9. 18; 연합뉴스, “속도붙는 북중경협 남북통합 걸림돌되나,” 2012. 9. 11; 한국일보, “북한 지하자원 중유출 심화,” 2009. 11. 1.

5. 소결

주변국에 대한 개별응답자의 인식 변화의 결정요인을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빈번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미동맹의 복원과 공고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때보다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최저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다시 2013년에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조사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유래없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북한 및 남북관계의 안보상황에 반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의 위협도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감소하였고 일본의 위협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었던 것이 아남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사건이 있었던 2010년의 결과와는 달리 중국의 부정적 국가이미지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 의한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황적 변수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가 상황적 변수들에 의해 즉각적인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행태와 신정부의 우경화로 인해 촉발되는 국민들의 부정적 대일인식이 일본의 국가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에 나타난 국가이미지의 변화가 상황적 변수들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현상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조사가 정기적 연례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의식의 흐름의 큰 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향후 한중, 미중의 관계는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일관계는 역사인식의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립적인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이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만 하지 못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특성상 국민정서를 배제한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